제12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남북통합을 위한 학술적 준비

의식·체제·사람의 통합을 위하여

〉〉 일시 : 2011년 2월 8일(화) 오후 13:00~18:00

〉〉 장소 :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PROGRAM

등록(13:00~13:30)

제1회의 (13:30~15:30) 통일의식 · 사회통합 · 농업개혁

• 사회 : **김영수**(서강대)

주제 1 :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 분석 : 1990–2007

• 발표 : **은기수**(국제대학원)
• 토론 : **강원택**(정치학)

주제 2 : 독일 통일과 여성

• 발표 : **한정숙**(서양사학)
• 토론 : **최윤영**(독어독문학)

주제 3 :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변화분석을 통한 북한 농업개혁 전략 연구

• 발표 : **김관수**(농경제사회학)
• 토론 :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휴식(15:30~15:50)

제2회의 (15:50~17:30)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지원

• 사회 : **황상익**(의학)

주제 4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심리, 신체적 외상 사건 경험과 정신건강상태 평가

• 발표 : **류인균**(의학)
• 토론 : **조영아**(상지대)

주제 5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 조사

• 발표 : **최명애**(간호학)
• 토론 : **김정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CONTENTS

제1회의

통일의식 · 사회통합 · 농업개혁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 분석 : 1990–2007
• 발표 : **은기수**(국제대학원)

독일 통일과 여성 ——— 07
• 발표 : **한정숙**(서양사학)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변화분석을 통한 북한 농업개혁 전략 연구 ——— 33
• 발표 : **김관수**(농경제사회학)

제2회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심리, 신체적 외상 사건 경험과 정신건강상태 평가 ——— 63
• 발표 : **류인균**(의학)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 조사 ——— 69
• 발표 : **최명애**(간호학)

제1회의 (13:30~15:30) 통일의식 · 사회통합 · 농업개혁

• 사회 : **김영수**(서강대)

주제 1 :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 분석 : 1990–2007

• 발표 : **은기수**(국제대학원)
• 토론 : **강원택**(정치학)

주제 2 : 독일 통일과 여성

• 발표 : **한정숙**(서양사학)
• 토론 : **최윤영**(독어독문학)

주제 3 :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변화분석을 통한 북한 농업개혁 전략 연구

• 발표 : **김관수**(농경제사회학)
• 토론 :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독일 통일과 여성

한정숙, 홍찬숙, 이재원(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분단과 통일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독일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개관하는 작업으로 역사 연구자(한정숙)에 의해 집필되었다. 둘째 부분은 동서독 통일 이후 여성노동이 시장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사회학 전공자(홍찬숙)에 의해 집필되었다. 셋째 부분은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여성의 삶의 변화가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 있고 작가들은 통일과 여성의 통합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으로 문학 연구자(이재원)에 의해 집필되었다.

제 1부
분단 통일 여성: 독일 현대사 속 여성의 삶과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독일 현대사, 특히 동서독 통일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삶에 관한 고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에서는 2차 대전 후 여성들이 독일 사회의 생존과 복구를 위해 짊어졌던 짐은 어떠한 것이었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핀다. 둘째 부분에서는 독일의 분단 이후 자본주의적 서독과 사회주의적 동독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법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었으며, 여성들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부분에서는 변화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능동적 행위, 동서독 통일이 여성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본다. 동서독의 통일 이후 변화된 체제는 특히 동독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평이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명제를 넘어서서 통일 전후 동독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고 여성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통일 전후 시기 독일여성들의 일상생활과 의식변화를 살펴보는 인터뷰자료들은 1990년대 초부터 출간되어 있다. 여기에 필자가 2010년 7월 독일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추가한다.

통일 과정 속에서의 여성의 삶의 변화는 통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성은 어떠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적, 인간적 고려를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I. 패전에서 재건까지

1. 독일 영시(零時: Stunde Null): 여성들의 시절

나치가 패전으로 독일의 몰락을 가져온 후 여성들은 사회적 생존의 구심점이자, 다시 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중심적 존재였다. 독일 남자들은 부재하거나 존재감을 상실하였다. 전쟁시기 동안 여성이 짊어져야 했던 짐과 종전 후 사회의 재건에 끼쳤던 공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최고 층위의 정치적 담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1985년 5월 8일 종전 기념 연설에서 리하르트 폰 바이츠재커 서독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하였다.

> 여성은 가장 암담했던 시기에 인간성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데도 가장 먼저 나서서 다시금 한 장씩 한 장씩 돌을 쌓아올리기 시작한 분들도 여성들이었습니다. 베를린을 위시하여 독일 전역에서 활약했던 잔해청소 여성들(Trümmerfrauen)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이러한 영웅적 공헌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잔해청소 여성들에 대한 공식적 기억도 종전 후 서독에서는 곧 사라졌다. 서독 정부수립 후 보수세력이 20년 집권하는 동안 여성은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동독에서는 노동하는 여성에 대한 장려책이 취해지면서 잔해청소하는 여성이 국가적 선전의 장에서 계속 등장하였다. 여성은 동서독 어디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다. 금욕적 여성가장. 여성들의 영웅적 활동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연구자들은 잔해청소 여성들의 세대를 일컬어 “기만당한 세대” 라고 표현하였다.

2. ‘재건기’의 독일 여성

1949년 5월 23일 서독 정부가, 그리고 같은 해 10월 7일에 동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동서독은 냉전체제 하 동서 진영의 동맹정책에 각각 편입되었다. 사회의 재건을 위한 사회정책 논의에서는 양성관계, 가족,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대한 성격규정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동서독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는 같은 점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든다면 그것은 동독과 서독에서 ‘재남성화’(再男性化)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에서 각기 국가가 세워지고 난 후에는 곧 남성이 지배권을 되찾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다만, 두 국가는 상이한 체제이념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기에 여성정책과 여성의 삶도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기본노선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재남성화는 상이한 논리와 담론의 뒷받침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두 사회의 여성지위와 구체적 젠더 정책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II. 동서독 여성의 지위

1. 서독 체제와 여성

1) 서독 기본법의 양성평등 조항

1949년 5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제정된 서독 기본법(Grundgesetz)에서는 남녀평등권이 명시되었다. 3조 2항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되었으며, 3장 3절에서는 “누구도 성별 때문에 .....우대받지 않는다.”는 구절로써 양성평등 원칙이 다시 확인되었다.

2) 가족 관계

기본법의 입안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여성은 '보호되어야 할 존재로 여겼다. 이는 여성이 마땅히 있을 곳이 가정이라는 전통적 관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정치 담당자들은 여성이 그들의 평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가족이며 가족의 강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기본적 태도는 기본법의 앞부분에서 일찌감치 표명되었다. 기본법 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은 국가체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법적 혼인으로 맺어진 핵가족이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본법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가 이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넘겨받을 수 있었다. 한편, 서독 기본법은 혼인, 가족 내에서의 양성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출산정책과 자녀수당 (Kindergeld)

서독의 가족정책은 인구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었다. 낙태, 피임, 출산억제 혹은 장려, 가족 수가 모두 인구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어졌다. 보수정당 집권기의 서독 정부는 기혼여성의 취업, 피임, 낙태가 모두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정책은 여성은 가정에 머무르면서 육아와 가사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국가가 출산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자녀수당은 서독의 출산-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 자녀양육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되 국가가 경제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뜻했다. 1954년 11월 13일에 자녀수당법이 통과되어 1955년부터 실시되었다. 세 번째 자녀부터 매달 25마르크씩을 지원받기로 한 것이다. 차츰 그 액수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자녀수당의 지급내용과 액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서독의 자녀수당 매월 지급금액 (단위: DM)

1950-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55년	1970년 b)	1981
셋째 자녀부터 25.	첫째 자녀 25	첫째 자녀 50
	둘째-네째자녀 60	둘째 자녀 120
	다섯 째 이하 자녀 70	셋째 자녀부터 240
1959년		
셋째 자녀부터 40.	1975년	1983 b)
	첫째 자녀 50	첫째 자녀 50
	둘째 자녀 70	둘째 자녀 100
1961년b)	셋째 자녀부터 120.	셋째 자녀 220
		넷째 자녀부터 240
첫째자녀 25		
둘째 자녀부터 40		

** 통일 직전인 1990년에는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수당만 130마르크로 올랐다. 통일 후 자녀 수당은 액수가 더욱 올랐다.

4) 여성노동

서독 사회 여성노동정책의 기본 노선은 여성의 공적 노동을 배제하지는 않되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서독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규정되는 것이며, 이는 복지정책의 요소를 가미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 아래서 여성노동은 자본의 요구에 따라 동원되거나 배제되기 마련이었다.

냉전 시기 서독의 집권세력인 반공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여성정책을 연상시키는 정책의 도입을 꺼렸다. 탁아소를 비롯한 보육시설의 설치도 사회주의권의 여성정책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보육시설 설치에서 나치 여성정책을 상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 재건기 서독 사회는 노동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다. 노동과 가사,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으로 1952년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약칭 MuSchG)이 제정되었다. 이는 어머니이면서 ‘노동관계’ 속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중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휴가를 제공하며 출산 후에는 직장 내 수유시간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의 해고를 금하는 것,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산부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임산부는 출산 전후 각각 6주일 동안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었다. 1965년에는 유급 출산휴가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로 약간 연장되었다.

서독 사회는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유치원은 1990년에 이르기까지 수요의 73퍼센트를 충족시킬 뿐이었고,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머니의 근무시간 전체 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시설은 아니었다. 또한 만 세 살 이하 어린이나 학령기 어린이들을 받아주는 시설은 없었다. 이 또한 사회주의적 여성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피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니, 냉전은 일하는 어머니의 상태개선에 큰 장애물이었다.

서독에서는 사실상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여성의 미숙련, 저임노동 취업이 묵인되었다. 고용자들은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노동분야와 남성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를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 대해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남녀임금차별을 유지하였다. “성별분리 노동시장”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결국 많은 서독여성들은 사회적 노동보다 가정을 택하였다. 이는 임금노동보다 자녀수당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녀 출산율이 상승하였다. 여성을 가정에 두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다.

서독 정부는 자국여성 노동력 대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증하였다. 1961년에 외국인 노동자는 686,000명이었으나 이십 년 후 그 수는 일곱 배에 이르렀다. 1961년에 서독 전체 노동자의 2.5%를 차지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십 년 후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파트타임 노동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1961년에 서독에서는 취업 연령(15세-61세) 여성 가운데 48.9퍼센트가 취업해 있었다. 1925년에도 취업 여성 비율이 이 못지않았음을 생각하면 전후 서독에서 여성의 취업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68 혁명 이후의 서독 여성

서독 정부의 보수적 여성정책은 1960년대가 경과하도록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변화는 여성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는 여성운동의 제 2의 물결이 시작된 시기였다. 서독에서는 이것이 1968년 혁명과 맞물려 일상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젠더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해방의 제 2의 물결은 제도적 법적 평등만으로 여성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한 여성들이 의식, 문화, 섹슈엘리티 차원에서 성차별을 극복할 것을 외치고 나온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은 특히 낙태의 자유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가시화하였다. 1970년 저널리스트인 알리스 슈바르처는 “나는 낙태하였다”라는 구호를 내건 여성들의 자기고백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낙태의 자유를 외치는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정치운동의 전면에 여성이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게 된 것도 68혁명과 함께 서독 사회가 경험한 큰 변화 가운데 하나였다. 베아테 클라르스펠트는 나치 전범을 추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과거 청산을 통한 서독사회의 자정을 촉구하였다. 급진파 운동에도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여성 저널리스트였던 울리케 마인호프는 68혁명 이후 가장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집단인 바더-마인호프단의 지도자가 되어, 도시 게릴라 전략의 이론을 수립하였다. 나치의 죄과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경제기적의 결실에 도취해 있던 독일 사회에 대한 급진적 도전에서 젊고 자의식 강한 지식인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68혁명에 참가하였던 여성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활동을 분화시켜 갔다. 좁은 의미의 여성주의 운동으로 나아간 여성도 있었고 반전평화운동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평화를 위한 여성 모임(Frauen fur den Frieden, 약칭: 여성평화회)는 핵무기 반대, 퍼싱 미사일배치 반대운동 등을 열성적으로 전개하였다. 또 한 분파는 환경운동으로 나아갔다. 페트라 켈리는 생태운동과 평화운동 양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녹색당(Die Grünen)은 68혁명 세대가 운데 환경-평화-여성운동의 흐름이 한데 합쳐서 결성된 정당이며, 지도부 구성에서나 일반 당원의 구성에서나 여성의 비율이 기족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동독에서도 여성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동서독 여성평화운동가들의 연대활동이 활발해졌다. 그것은 동서독 역사에서 그들 자신도 예상할 수 없었을, 그리고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2. 동독 체제 하의 여성

동독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다. 동독 공산당의 법률고문이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권을 비판하며 반체제 인사로 돌아선 롤프 헨리히는 동독체제를 후견국가(der vormundschaftliche Staat)라고 불렀고 서독의 역사학자 야라우쉬는 복지독재(welfare dictatorship)라는 개념으로 그 특징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국가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후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독체제는 후견, 독재 등의 꼬리를 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동독체제가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권과 복지를 보장해주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은 함축하고 있다.

여성정책도 이 같은 체제전체의 지향과 목표 아래서 형성된 것이었다. 동독 정권은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의 이념 아래 여성정책을 형성하였고 동독 여성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물론 모든 여성이 체제에 만족하면서 산 것은 아니었다. 여성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은 별로 없었으나, 민주주의의 제한과 정치적 억압을 특징으로 하는 동독 체제에 대해서는 선도적 여성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동독체제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운동에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성들이 참여한 광범한 집회와 시위는 동독체제의 몰락, 동서독 통일의 기폭제가 되었다.

2-1. 동독의 여성정책과 여성지위

동독은 이념적으로 남녀평등을 천명한 사회였다. 1949년에 제정된 동독 헌법은 양성관계에서 절대적인 남녀평등을 선언하였다. 제 7조 1항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이어서 2항에서는 '여성의 동등권에 위배되는 일체의 법률과 규정들은 폐지된다.'고 명시하였다.

동독 사회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특히 산업부문에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국가이자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체제로서의 동독사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1) 노동과 여성

동독 체제는 생산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 분업을 통해 노동력을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점차 육체노동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잠재력을 발전시켜 갈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미래상은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동독의 집권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장려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잔해청소 여성'의 이미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취업 연령대인 15세에서 60세 사이의 여성 90 퍼센트 정도가 취업하였다. 같은 시기 미국의 취업연령대 여성 가운데 취업자는 36-38퍼센트였다. 또한 동독 전체 직장생활자의 46-48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여성의 1/3이 숙련노동자였고 여성 사무직 종사자도 1/3에 달했다. 여성은 의료, 교직에서 남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률분야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점했다. 여성과 남성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았다. 다만 정치 고위직에는 여성 진출이 드물었다.

애초에 동독 정부는 여성을 생산노동에 참여시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여성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사와 사회적 노동의 병행을 힘들어 한 여성들은 숙련노동을 하기 위한 기술수련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출산도 기피하게 되었다. 동독 정부는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보다는 여성의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특히 에리히 호네커가 동독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동독 정권은 1970년대부터 소비와 복지를 향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2) 출산 육아

동독 여성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이른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첫 자녀 출산 평균연령이 1955년에는 22.8세, 1960년에는 22.2세였고 1970년에는 21.9세였다. 자녀는 두 명 이상을 낳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동시에 성인 여성의 90퍼센트 이상은 전일제 근무를 하는 직장여성이었다. 여성과 남성 공히 평균 노동 시간은 주당 43 3/4시간이었다. 여성은 사회적 노동, 경제적 자립, 국가의 육아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육아지원에는 장기간의 유급 출산휴가, 아주 어린 아기부터 받아주는 탁아소, 유치원시설 등이 있었다. 유급 출산휴가는 1976년에는 크게 확대되었다. 출산 여성은 둘째 아기부터는 1년 동안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었으며, 휴가 후 이전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첫 아이 때에도 출산휴가가 적용되었고 기간도 18개월로 연장되었다. 휴가는 아이 아버지나 친척이 받을 수도 있었다.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도 20일 동안 유급으로 주어졌다. 여성들은 평생 전일제 노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였고 이를 강제동원이나 여성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성의 경제력과 육아지원 제도 덕분에 독신모도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다.

3) 동독 여성의 일상적 삶

통일 전 동독 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평균적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도 처리하였다. 따라서 여성이 이중부담(Doppelbelastung)을 졌다는 것은 자주 지적되었다. 이중부담이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사회의 여성 지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빈번하게 동원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독 남성도 집안일을 상당부분 분담하였다. 동독 여성들은 의류, 가전제품 등 소비재를 서독에서처럼 풍족하게 구입할 수는 없었다. 주택 사정도 빠듯해서 결혼을 해야 독립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동독 여성이 반드시 직장에 얽매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여성이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동독의 관청에서는 어떤 일자리이든 알선해 주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원치 않는 여성은 전업주부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여성은 경제력이 있었으므로 일반적 가족관계나 이혼, 출산, 낙태 등의 문제에서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되었다. 이혼 가운데 2/3가 여성이 주도한 이혼이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도 사회주의 여성해방 담론의 오랜 전통을 가진 동독에서도 여성해방이 섹슈엘리티 측면에서의 해방이나 자유연애로 이해된 적은 없지만 여성이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 여성들은 대개는 전통적 일부일처제를 충실히 고수하였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분방한 성관계를 가졌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실험하는 여성도 존재하였다. 한 젊은 여성 평화운동가는 동독 체제전환 전, 1980년대에 두 명의 남자 친구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셋이 함께 양육하는 생활을 했다. 게다가 곧 새로운 남자친구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4) 동독의 여성정책과 체제 존립 비용론

동독 국가는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동원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 도나 하쉬는 동독의 여성정책이 동독 체제의 존립에 미친 영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동독 정권이 여성을 위해 소비-복지 위주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재정부담을 초래하여 동독 공산주의의 붕괴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증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시작했을 때 고르바초프가 소련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겼던 것은 복지정책보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농업 침체였다. 동독과 맞먹는 복지정책을 가졌던 소련에서 과도한 복지비용이 문제되었던 적은 없다. 국민 총생산에서 군사비 지출 비율이 훨씬 더 낮았던 동독은 소련발 체제개혁 움직임에도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여성 관련 정책과 동독 정권 운명의 상관관계를 직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성급하다. 동독 체제의 전환, 몰락,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여성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고찰은 이와는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2. 동독체제에 저항하는 여성

동독체제 성립 시기부터 체제에 저항한 여성이 없지 않았다. 비타협적 여성들을 수용하는 시설은 호엔에크(Hoheneck)에 있는 여성정치범 수용소였다. 이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 다수는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시도했다가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동독정권에 비타협적인 여성에 대한 가장 전형적 박해는 추방이었다. 이들은 호엔에크를 비롯한 감옥에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수감되었다가 서독으로 보내지곤 하였다. 유타 갈루스는 그러한 여성 가운데 하나다. 그

녀는 이혼 후 딸 둘을 데리고 동독에서 생활하다가 서독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딸들은 데리고 오지 못했다. 딸들도 서독으로 올 수 있게 하고자 노력했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녀는 동서베를린의 경계에 있는 찰리검문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였다. 이 이야기는 '찰리 검문소의 여인'(Die Frau vom Checkpoint Charlie)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형성하여 전개하는 사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동독에서 여성이 주된 활동자로 참여하는 최대단체는 독일 민주여성연맹(Demokratischer Frauenbund Deutschlands, DFD)이었다. 이는 관변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여성 고유의 문제에서도, 여성들이 참여하는 일반적 사회운동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진정한 관심을 대변하지 못했다. 여성들의 운동은 1980년대에는 아주 활발해졌다.

1980년대에는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여성단체들이 생겨났다. 동독의 여성모임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평화단체이고, 둘째는 교회여성단체이며 세 번째는 동성애 모임이다. 이들 세 유형은 성립 동기나 활동의 주된 영역이 달랐지만 밀접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했다.

1) 평화를 위한 여성 모임

동독의 시민운동은 초창기에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처음부터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평화운동이었다. 여성들의 평화운동의 중심기구는 평화여성회였다.

동독의 평화여성회는 1982년을 거쳐 가면서 결성되었다.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동서진영의 군비증대와 군사주의 확대에 맞서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동독에서 이들의 세력이 확산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982년 3월 25일 여성징병제 법률의 제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라고 내세웠지만, 여성들은 이 선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별분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여성들의 논의조직이 여성징병제 거부를 위한 연대조직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하였다. 화가 베르벨 볼라이, 그녀의 동료 카티야 하베만, 시민운동가 울리케 포페를 비롯한 동베를린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징병제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여 짧은 시간에 150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 여성들은 징병제가 "여성의 여성됨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할레, 라이프치하, 예나 등 동독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도 유사한 성격의 여성 평화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동독의 독자적인 여성평화운동을 확립하기 위한 전국적 여성평화운동가 회합이 정례화 되어 지방도시에서 개최되었다. 평화 여성들은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공공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군사주의적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평화적 심성을 가르기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베를린의 평화여성모임은 1983년 5월 서베를린에서 열린 제 2차 유럽 핵군축(END, European Nuclear Disarmament)회의[1]에 공개서한을 보내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였다.

평화여성모임에 대한 동독정권의 탄압도 심해졌다. 1983년 12월 12일에는 볼라이, 포페, 이레나 쿠쿠츠, 유타 자이델 등 네 명의 여성 활동가가 체포되었다. 서독 녹색당과 교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네 명은 모두 향후에 동독 반체제 운동의 열성적 활동가가 되어 동독체제 붕괴와 통일 전후한 시기에 동독 중앙 정치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인물들이었다. 국제적 압력 덕분에 결국 1984년 1월 24일 볼라이와 포페는 석방되었고, 네 활동가들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다.

---

1) 유럽핵군축회의는 "폴란드에서 포르투갈까지 핵 없는 유럽"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개된 전유럽적 차원의 반핵 평화운동으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해마다 개최되었다.

동독 반체제인사들의 활동을 추적해 왔던 여성 저널리스트 베티나 뢰더는 서독의 평화운동이 동독 여성평화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볼라이도 서독의 평화운동이 미친 영향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기 없이 평화 만들기”(Friedenschaffen ohne Waffen)라는 서독 평화 운동의 구호가 동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회고했다.

2) 교회 여성단체

분단 시기에도 동서독 사이에서 인적 교류가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개신교)교회였다. 교회는 서독으로부터 인력을 충원받기도 하면서 활동을 지속해갔다. 특히 브라우제뷔츠 목사의 분신자살 이후 교회는 반대세력을 위한 보호막 역할을 일정하게 하였고 여성운동을 위해서도 지붕 역할을 해주었다.

동독 기독교 교회 내 여성운동은 2차 대전 후 초교파 기구의 테두리 내에서 시작된 여성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동독의 교회 여성들은 여성신학자 회합, 여성지원 프로그램, “여성주의 워크샵”들을 조직하여 가족, 자녀, 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낙태, 여성신학, 여성과 언어, 여성사, 마녀 사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모든 여성이 참가할 수 있는 여성회람서신집(Frauenrundbrife)인 “릴라 반트(Lila Band)”도 교회여성모임에서 태어났다.

반체제 운동과 여성운동에서 동독 교회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체제전환기에 독립여성연맹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코르넬리아 마츠케는 개신교 행사에 참가하면서 평화운동과의 관련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정치활동이라도 하려면 가능한 대안이 교회 밖에 없었다.”라고 회고하였다. 그에 반해 반체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냉소적인 평가도 나왔다. 영화감독인 프라야 클리어의 평가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체제전환 때까지, 사회주의 통일당의 손바닥 안에 있지 않은 운동은 예외 없이 교회의 지붕 아래서만 존재하였다. 여자들에게는 불운한 일이었다!”

동독 기독교 교회와 여성주의의 관계는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다. 동독사회는 원칙과 이념에서는 확고하게 양성평등을 지지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기독교 교회는 가족중시적 이데올로기에서나, 여성차별적 노동조건에서나 여성의 성직 임명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에서나, 반여성주의적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3) 여성 동성애 단체

원래 동독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억압적인 사회였다. 동독에서 여성 동성애자 모임이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서독 동성애 담론의 영향을 받아서였다고 한다. 1973년 1월 서독 텔레비전에서는 “비뚤어진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다.”라는 영화가 방영되었다. 서독 텔레비전의 시청이 가능했던 동독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이를 시청한 후 1974년 동베를린에서 남녀 동성애자들을 포괄하는 토론 클럽인 ‘베를린 동성애자 이익공동체’를 결성하였다. 그 후 동독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동성애 그룹이 형성되었다. 여성 동성애자들은 차츰 동성애 일반론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차별화하고 독자적 모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베를린에서는 ‘교회 안의 여성동성애자’라는 단체가 생겼고 드레스덴, 예나 등 다른 도시에서도 여성 동성애자 모임이 생겨났다. 드레스덴 여성동성애자 그룹은 1985년부터 여성축제를 개최하여 여성 평화운동가들을 비롯한 다른 여성 그룹들을 초청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 여성동성애자 단체는 범지역적 여성 연결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III. 동독의 체제전환과 여성의 역할

1.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동독 시민운동과 여성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의 새로운 서기장으로 취임한 후 내놓은 개혁정책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과 사회의 운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동독의 시민운동은 큰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86년 1월에는 평화인권발의(Initiative für Frieden und Menschenrechte)가 결성되었다. 이는 교회의 보호막 속에 들어있던 평화-인권-환경운동이 독립적 세력으로서 활동을 펼치기 위해 결성한 것이었다.

1988년 이후의 동독의 시민운동에서는 여러 인물이 명멸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베르벨 볼라이와 울리케 포페였다. 볼라이는 동베를린 평화여성모임의 주도자로서 이미 평화운동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굳히고 있었지만, 동독에서도 개혁을 향한 요구가 드높아지면서 그녀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 볼라이는 체제전환의 큰 물결 속에서 '혁명의 어머니'(Mutter der Revolution)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1988년 이후의 그녀의 활동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반향과 관련된다.

1988년 1월 동독 시민운동가들은 "자유는 언제나 달리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다."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을 구호로 내걸고 동베를린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볼라이는 이 시위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서 1월 25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월 초에 서방으로 추방되었다. 볼라이는 서독을 거쳐 영국에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추방은 국제적인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페트라 켈리는 동베를린에서 에리히 호네커를 만나 볼라이의 귀국을 허락할 것을 호소하였다. 호네커는 이를 받아들였고 볼라이는 8월 초 동베를린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볼라이의 추방과 귀환은 동독 반체제운동가들 사이에서 그녀의 위치를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귀환 후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조직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노이에스 포룸'(Neues Forum)이다.

1) '노이에스 포룸'

1989년 여름 동독사회를 동요케 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치적 개혁 외에 여행의 자유 문제였다. 여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물결이 만들어놓은 들끓는 상황은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동독시민들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국경이 개방되자 헝가리를 통해 오스트리아로 넘어간 후 서독으로 넘어갔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독 대사관에 돌입하여 여행의 자유를 요구한 끝에 서독행 기차를 타기도 했다.

'노이에스 포룸'은 9월 9일에 서른 명의 발기인으로 출발했다. 발기인의 출신성분은 의사, 목사, 학자, 문화예술인에서 학생, 석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연령과 거주지도 모두 다양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열 명, 남성이 스무 명이었다. 이 단체의 창립선언문은 "새 출발 Aufbruch 89-노이에스 포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소통이 부재함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손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의 표현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적 개혁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창립자들은 시민들의 참여와 발언을 통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바라고 있었다. 창립선언문에는 체제나 이념의 문제는 들어있지 않았다. 창립자들은 동독체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했으며,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체제를 인간화하려고 했다. '노이에스 포룸'의 기본정신은 기초민주주의(Basisdemokratie)를 확립하자는 것이었다.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구절로 끝나는 창립선언문은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 달 사이에 이십 만 명이 이 단체에 가입하였고, 노이에스 포룸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집회에서 울려 퍼진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되었다. 여성평화운동가의 주도로 형성된 ‘노이에스 포룸’은 1989년 가을 동독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가장 폭발력 큰 의제 설정자가 되어 있었다.

2) ‘바로 지금 민주주의’

1989년 가을에는 그 외에도 여러 시민조직들이 생겨났다. ‘바로 지금 민주주의’(Demokratie Jetzt), ‘민주적 새 출발’((Demokratischer Aufbruch), ‘연합 좌파’(Vereinigte Linke) 등이 그것이었다. ‘바로 지금 민주주의’는 울리케 포페가 중심적 역할을 한 단체였다. 포페는 여성평화모임에서 볼라이와 함께 지도적인 역할을 했고 평화인권발의에서도 함께 활동했으나 ‘노이에스 포룸’ 창설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포페는 볼프강 울만, 콘라트 바이스 등과 함께 ‘바로 지금 민주주의’를 조직하였다.

‘바로 지금 민주주의’는 1989년 9월 12일 열두 명의 시민운동가를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을 알렸다. “자신의 일에 개입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창립선언문은 사회주의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에서 ‘노이에스 포룸’ 창립선언문과 차이를 보인다. “역사적으로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는 이제 그 본래의 민주적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패망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 받는 인류에게는 인간적 공동생활(더불어 삶)의 생존 가능한 형태를 찾는 길에서 서구식 소비사회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구 소비사회의 복지를 위해서는 다른 세계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2. 장벽 붕괴에서 통일까지

동독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개혁 요구는 동독 시민사회를 움직였고 이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통일을 향한 외침의 결과였다기보다 동서독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원하는 동독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장벽 붕괴 후 얼마 안 있어서 예상하지 않았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를 내걸고 동독사회의 민주화와 쇄신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집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Wir sind ein Volk.) 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동독 민주화의 요구가 동서독 통일의 요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에 열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동독인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컸다. 지도적 여성인사들 가운데서는 베르벨 볼라이나 프라야 클리어가 명백히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클리어는 베를린 장벽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가 기껏 투쟁했더니 우스운 꼴이 돼 버렸다. 그 소식의 엄청난 힘은 나로 하여금 밤거리로 뛰쳐나가게 한 게 아니라 이불을 뒤집어쓰고 눕게 만들었다.....나는 동독이 풍선처럼 터져버릴까 봐 정말 두렵다.....우리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최후의 돌 한 덩어리까지 차지해버리기 전에 최소한 메클렌부르크라도 점령해야 할 것이다.”

볼라이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장벽이 무너진 지 이틀 후인 11월 12일 노이에스 포룸의 다른 주요 회원들과 함께, 동독시민들을 향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그대들은 정치혁명의 영웅입니다. 여행과 빚만 늘어나게 하는 소비 마약주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정치개혁의 실현과 사회계약적 경제 개혁안의 작성을

요구하십시오. 진정한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자유선거를 요구하십시오. 헌법재판소를 요구하십시오. 말과 언론의 자유를, 사법개혁, 교육개혁, 독립노조를 요구하십시오. 진실한 경제상황의 즉각적이고 솔직한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이는 장벽붕괴가 가져온 엄청난 열광 속에서 동독 민주화 운동 주도세력이 요구해 왔던 도덕적 대의가 묻혀 버리고 그들의 역량과 주도권 또한 인정받지 못한 채 서독 중심의 결정방식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 반응이었다.

실제로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반체제 운동가들은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볼라이는 장벽 붕괴를 선부른 것, 서독에 의한 동독 접수를 초래할 사건으로 여기면서 일반 동독인들과 큰 의견차를 드러내게 되었고, 그녀의 주장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나 개혁 세력 사이에서나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동독에서 40년 동안 집권당으로 군림해왔던 사회주의 통일당에서는 호네커가 서기장 직을 물러나고 에곤 크렌츠가 뒤를 이었다가 곧 축출되었다. 그 후 온건파인 한스 모드로가 총리직에 취임하여 정국을 이끌어갔다. 그런데 서독이 통일논의를 주도하면서 사회주의 통일당과 그 후신인 민주사회당은 결정권을 급속하게 잃어갔다. 이는 동시에 동독이라는 국가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던 세력 전체의 결정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동독의 정국은 그때까지의 집권당도 그때까지의 반대세력인 개혁지향적 시민운동세력도 아닌 외부세력, 곧 서독정치세력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동독 내 친서독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자기 사회를 자기 힘으로 바꾸고자 하였던 동독 개혁세력의 무력감은 더해갔다.

물론 노이에스 포룸을 비롯한 동독의 시민단체들은 독일통일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동독 민주세력의 목소리를 전하려 했고 흡수통일 과정 속에서 상실될 동독인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했다. 볼라이, 포페는 각기 '노이에스 포룸', '바로 지금 민주주의'의 대표로서 원탁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동독 총선에서는 '동맹 90'(Bündnis 90)이라는 선거연합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후보를 냈다. 그리고 일부는 동서독 통일 후 동맹 90/녹색당 소속으로 통일독일의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독 문제는 동독인의 손으로 결정한다는 이들의 바람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1989년 12월 3일에는 동독에서 독립여성연맹(Unabhängige Frauenverbund)이 창설되었다. 독립여성연맹은 개혁과 체제전환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고유한 문제를 논의하고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창설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각지의 소규모 여성그룹들이 여성주의적 요구를 내걸고 전개한 움직임이 주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변화를 요구하는 에르푸르트 여성' (Frauen für Veränderung Erfurt)그룹은 1989년 9월 2일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의 비폭력적, 생태적, 사회적, 민주적 전환을 여성의 이름으로 촉구했으며 이어서 "자기결정과 전망"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문에서 에르푸르트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자기결정권과 이에서 비롯되는 권리를 드러내서 말해야 하고 관철해야 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와 상상력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끔 용기를 북돋우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자의식이야말로 국가, 사회, 경제에서의 가부장적 구조를 문제로 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수호되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이 회복되며 보존될 수 있도록 권력 재편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이 같은 요구는 명백히 관변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담론의 자장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독립여성연맹 창립취지문인 '촉구하는 글'(Aufruf)은 체제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다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사회적 격변의 현 상황 속에서 여성의 이익은 지금껏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 상태가 계속 악화될까,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서 여성이 다시금 배제 당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공공의 인식도 없고 여성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대변할 방도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도합시다. 여성들이여, 우리 스스로 조직합시다.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이해대변 기구를 만듭시다.

연맹은 두 명의 대표를 중앙원탁회의에 파견하였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동독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권력참여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1998년 6월에 해체되었다.

1990년 3월에 치러진 동독총선의 결과는 동독 개혁세력에게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통일 논의가 동독인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던 이들의 입장은 존중되지 않았다. 울리케 포페는 장벽붕괴와 함께 독자적 문화를 가진 동독이 끝났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하였다. 독일인들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국민이므로 역사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고 반성하기 전에 통일이라는 보상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향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서독의 진보세력도 통일 논의에서 무력하게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3. 동서독 통일과 여성

동서독 통일과 그 이후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집단으로서는 옛 동독의 여성이 통일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다. 동독적 정체성 자체가 상실된 것과 같이, 동독이 흡수되면서 소멸된 것은 단지 동독 공산당 지배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제도만이 아니었다. 동독체제 아래서 형성되었던 사회문화교육제도와 기구가 와해되고 서독식으로 변화하였다. 여성정책은 근본적 변화를 겪은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여성의 완전고용 원칙은 폐지되었고, 출산-육아휴직, 탁아소, 어린이집 등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원책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동독 여성들은 장벽 붕괴 후 서독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져 감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일 전에도 이미 감지되었다. 동독의 국영 림바하 오버프로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 공장이 서독 쉬서 기업에 인수됨에 따라 서독 기업의 노동자로서 일하게 된 동독여성 노동자들은 동독의 여성친화적 정책들이 없어지게 되리라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닷새 휴가만으로는 안 되지요. 동독 여자들은 아이 하나가 아플 때마다 20일씩은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 건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해야 되겠네요. 우리 국가가 사회정책적 조치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 서독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을 부러워하고 소비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독 여성도 있었다.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동독 여성의 태도는 다시 서방의 여성주의자들에게 당황스러운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장벽 붕괴 얼마 후 동독 여성들을 인터뷰했던 에리카 피셔는 이렇게 썼다.

동독여자들은 텔레비전 토론에 여성 토론자가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들은 동독 국가의 정책은 성별 중립적인 것이자 인간의 일상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드릴 수 없는 그 무엇 같다고 말했다. 다른 문제에서는 당당한 자부심을 과시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부러움에 기가 질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들이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정치적 투쟁성과'들이야말로 자기네 나라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한 원흉이기라도 한 것처럼 깎아내릴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회적 경험이 각기 다르면 이에 맞서 논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구동독 여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국가가 후견자로서 그들에게 제공하던 것을 별다른 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동독 여성들 사이에서 서방식 여성주의가 발전하거나 퍼지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서방 여성주의의 요구 사항들 중 상당 부분을 여성시민들에게 미리 제공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장벽 붕괴 이후에는 서독의 소비생활이 자기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리라고 기대하는 여성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장벽 붕괴 후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요.....그런 불안한 느낌이 벌써 조금씩 드네요." "우리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문제를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는 이런 말들을 가만히들 해요. 쉬서가 분명히 해마다 이런 저런 생산 작업장을 폐쇄할 것이다. 이 회사는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고 거기선 약자가 버텨나갈 수 없는 법이니까."

통일 후 동독 여성들은 불안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해야 하였다. 동독에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새로운 일자리는 충분히 생겨나지 않았다. 1992년 12월 동독 실업 인구의 64퍼센트는 여성이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특히 부족했다. 실직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육아, 가사를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다수의 구 동독 여성들이 서독으로 이주해 갔으나 그들은 서독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여성정책에 부딪쳤다. 탁아소, 유치원, 전일제 학교가 서독에는 없거나 부족했고 비혼모, 독신모는 직장에서 환영받지 않았다. 제도적 변화 외에도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일상적 삶에서 연대와 상호부조를 제공하던 노동 공동체, 이웃 공동체가 해체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필자와 인터뷰한 구동독 출신 여성들 중 동서독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들도 솔직히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경쟁강화로 누구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동독 남성에게도 힘들었지만 여성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동독 여성들은 가혹한 상황에 출산감소로 답하였다. 1990년 동독의 신생아는 178,000명이었으나 통일 직후인 1992년 구 동독 지역 신생아는 87,000명에 불과하였다.

제 2부
독일통일과 여성의 사회적 통합 - 노동시장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I. 서론

현실사회주의가 역사적 실험이었던 것만큼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역시 새로운 실험장이 되고 있다. 여타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달리 구동독 사회는 붕괴와 함께 구서독으로 흡수통일되면서 다른 탈사회주의 사회들과는 달리 재빨리 안정을 찾아갔다. 동시에 구동독 경제에 대한 투자는 지연되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대규모 인구가 구서독사회로 이주하면서 구동독 지역은 통일독일의 주변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여성과 관련해서도 여성들의 이주는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에서와는 달리 성매매로 연결되기 보다는 노동이주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주의 동기는 남성에 비해 다양하지만 이주는 주로 직업교육기회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서독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구동독 지역의 삶에 대해 좌절하거나 서독에 대한 선망으로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의 고령화를 재촉하고 있다. 또한 구동독 방식의 육아에 대한 회의와 서독제도 유입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불안을 느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현재까지도 서독에 비해 평균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구소득의 절반을 벌어들이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아이가 생겨도 결혼을 마다하는 등 가족화의 방향보다는 오히려 개인화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성들의 개인화 경향은 구서독 사회에서 70년대 이후에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구체적인 행태에 있어서는 구동독 지역에서와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신자유주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구동독 사회는 독일사회의 미래를 앞서서 보여주는 현실 실험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 동서독 통일의 특징

1. 저항보다는 탈동독(인구유출)에 의해 지배된 통일과정

구동독의 붕괴에는 저항과 탈출이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효과적으로 기여했으나, 독일통일에는 저항에 기초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탈출심리에 의한 투표결과가 일방적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도 발언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하여 통일 후 여성들은 구동독사회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잃고 서독으로 대규모 이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당시 구동독의 중요한 저항세력이었던 구동독 여성운동세력에 의해 구동독의 보육시설이 대체로 유지되는 긍정적 결과가 있었다. 구동독 지역에서 유지된 보육시설은 현재까지 구동서독 여성들의 노동시장 행태 차이를 초래하는 기반이 되며, 구동독 지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노동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이중의 변동”: 통일 + 신자유주의 산업구조조정

구서독에 흡수통일 됨으로써 구동독은 통일과 함께 80년대 이래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 구서독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조합주의 사회국가체제로 편입되는 ‘이중의 변동’ 아래 놓인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구서독 시스템의 유입으로 인해 구동독 여성들이 전업주부화의 압력은 비교적 강하게 받지 않았으나, 대신에 시간제나 비정규직 노동력, 장기실업자로 주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III. 통일 후 구동독지역 인구유출(서독이주)의 젠더 특성

구동독 출신 여성의 서독이주는 산업화 초기 도시화과정이나 현대의 탈사회주의화 이후의 여성이주, 세계주변부로부터 세계중심부로의 여성이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미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런 경우들과는 달리 주로 정규직업교육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하여 결혼이주나 이주 후 성산업 유입, 가사노동자로 취업되는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비교적 동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이주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8~25세 연령층 여성 중심의 이주: 이주나 역이주(구동독 귀환)에서 가장 이동성이 높은 집단, 주로 (직업)교육이주의 목적

(2) 구서독 지역 뿐 아니라 구동독 주변부에서 구동독 중심도시로도 이동이 많다. 그러나 역이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3) 여성고급인력 중심의 유출, 고학력여성들은 이주와 역이주 모두에서 이동성이 높다.

(4) 이주동기의 성차: 교육이주에서나 직업관련 이주가 아닌 개인적 동기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고, 동시에 교육이주나 직업관련 이주의 경우에도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성과 달리 일단 취업하면 이주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IV. 독일사회 “이중의 변동”과 구동독 여성 노동시장지위의 변화

1. 논쟁점: 여성은 통일의 최대 피해자인가?

통일 초기 구동독 여성들은 통일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인식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는데, ‘여성이 통일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에 통합되어 있었는데, 통일 후에는 자본주의화와 노동유연화라는 이중의 변동 속에서 여성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성노동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삶의 기회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통일 20년이 지나면서 통일 독일에서 구동독 여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인식은 초기의 ‘피해자화’에서 여성지위의 다양화 또는 양극화로 바뀌고 있다. 통일 초반에 극적으로 증가한 실업률과 극적으로 감소한 출산율 등 여성의 불안한 삶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었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통합된 정도가 서독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

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가 보여주는 구동독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정도가 삶의 질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통일 20년이 지난 현재 구동독 주민들 중에서 자신이 사회의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증가했고, 노동유연화가 불안정 노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며 장기실업의 경험 역시 여성들에게 더 빈번하기 때문이다.

2. 통일 후 여성 노동시장지위 변화: 구동서독 지역 비교

1997년에 구동독 지역 여성 실업률이 최고치에 도달해서 21.6%에 이르는데,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추세이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상승한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인다. 2002년부터는 여성취업부문인 공공 서비스 영역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실업률이 역전되어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에 비해 저조하다가 2007년 16.8%로 양성이 동일해졌다. 남녀 실업률의 역전은 구동독 지역의 제조업 성장으로 사업서비스업이 확장되면서 여성인력을 흡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높은 학력수준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구동독 지역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구동독 여성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실제로 여성취업률은 2004년의 경우 구동독 지역 58.1%, 서독지역의 경우 58.5%로서 비슷한 수준이었다(박귀천, 2006: 81). 그러나 비슷한 취업률 속에서, 또 훨씬 더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구동독 지역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지 않고 높은 노동참여의욕을 드러낸다.

서독지역과 비교하여 구동독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패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1) 높은 경제활동참여율, 2) 높은 전일제 비중, 3) 3세 이하 영아를 둔 시기에도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 4) 가구소득에서 크게 차지하는 여성 소득 비중 등이다. 통일 20주년의 시점에서도 구동독 지역 여성들의 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은 약 44%로서 통일 이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반면에 서독지역에서는 그간에 그 비중이 다소 상승해서 약 28%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구동독 지역 부부들 중 맞벌이 비중은 약 3/4에 이른다(2007년 72%), 여기에 부부 중 한 사람은 취업중이고 한 사람은 실업자인 경우까지 합치면 그 비중은 83%로서 1990년 통일 당시와 다르지 않다. 부부관계에 있는 여성 중 6%만이 전업주부인데, 이런 '전업주부부부'가 서독의 경우에는 20%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1990년의 34%에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서독지역에서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의욕에 부정적 작용을 미치는 대표적인 성차별적 제도로 지적되는 소득세 부부합산제도(Ehehgattensplitting)는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동독 지역 여성들은 결혼에 생활을 의존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재산소득이 없고 여성의 가구소득기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한데, 동일한 조건에 있는 구서독의 여성들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2008년 모든 아동의 약 절반가량이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러한 경우가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구동독 지역의 약 1/4 정도이다. 즉 여성이 주요 가구소득원인 경우가 서독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빈곤과 관련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구동서독 지역 간 성별 소득 격차를 비교하면 구서독 지역에서 성별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데, 그것 역시 1) 구동독 남성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고 소득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고, 2) 구동독 지역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구서독 여성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전일제 비율도 높고, 시간제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이 더 길며, 시간제보다는 전일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V. 여성에게 나타나는 서독제도 의존성과 동독 정체성

1. 구서독 '보수적 복지국가 체제'의 완만한 변화

통일 후 독일헌법인 기본법에 여성평등 조항이 강화되고 통일협약에서 구동독의 보육인프라 유지를 선언하였으며, 또한 통일독일 전체 지역에서 보육인프라 강화를 법제화하는 등, 법적 측면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강화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의 성주류화 정책의 영향으로 여성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성주류화 정책은 예컨대 보육시설 확충을 강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녀 개인들의 상호조정을 통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등 노동유연화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법적 규정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게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통일 후 여성의 일/가족 양립과 노동시장 통합이 규범적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특히 20시간 이하의 시간제 고용)로 타나나는 경향을 보인다.

2.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구동독 여성들의 사례연구: 심층 인터뷰(3건)

이처럼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구서독 지역 여성들은 전업주부 역할에서 보조적 취업인구로 제한적인 역할변화를 겪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 남아 있는 여성들이 보육시설 유지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구서독 여성들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강한 '일하는 여성' 정체성을 보이는데 비해서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보다 강고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일 후 구동독 여성들의 지위변화와 사회통합양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현재 구동독 지역에 남아 있는 여성들 뿐 아니라 구동독 지역을 떠나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서독으로 이주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고 또한 이들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서, 본 연구에서 이 부분은 세 건의 인터뷰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다룰 수 있었다. 애초에는 두 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계획했으나 준비과정에서 네 명과 연락이 되었고, 그 중 한 명과는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구동독에서 이미 대학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였고 그 중 두 명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 여성사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1) 우선 구서독 지역에서도 구동독 출신여성들은 잘 알려진 대로 여전히 강한 '일하는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물론 조사 대상자 중에서 두 명이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 정체성을 도전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겠지만, 그들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직업생활 자체를 매우 즐기고 있었다.

2) 구동독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기득권을 누린 여성들이 구서독 지역 생활에서도 성공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대졸학력과 관련된다. 자신이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권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례의 경우에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졸자의식이 미약해서 자신의 현재 직업이 대졸학력과 유관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녀 역시 약간의 하향취업을 무릅썼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두 여성의

경우에는 대졸학력이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본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구동독에서 대학교육은 일종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구동독 출신의 여성 사회학자인 될링(Dölling) 역시 이와 동일한 견해를 보인 바 있다.

3) 안정된 가정생활이라는 소시민적 이상과 관련하여 구동독 출신 여성들 역시 나름대로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 사례1은 출산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혼한 남성과 초혼한 상태로 각자가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분위기를 못 견딜 만큼 젠더의식이 명확한 경우였다. 반면에 사례2와 3은 상당히 소시민적인 가정적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에서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향을 감추지 않았다. 사례2의 경우에는 아직 직장생활 중이라서인지 직장동료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구동독 지역에서 관계했던 사람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부부만의 집과 자동차를 정성껏 보살피고, 부부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사례3의 경우에는 직장동료보다는 같이 구동독에서 망명했던 동료들이나 구동독에 남아 있는 친척들과의 왕래가 많았고, 자신의 옛 직장동료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그러나 안정된 가정생활이라는 소시민적 이상이나 취업으로 인한 기회비용조차도 구동독 출신 여성들의 취업의욕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3의 경우에조차도, 대학생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줄 정도의 경제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직장이 인도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자녀가 있고 또 남편이 직장에서 월등히 좋은 자리로 승진했으며, 자신의 승진기회는 매우 제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직장생활을 지속했던 것이 단순한 경제적 이유에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장생활로 인한 기회비용의 크기 보다는 직장생활로 가능해지는 자율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 상대적으로 비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구동독 지역 여성의 동독 정체성

통일 20년이 된 현재 구동독 지역 여성들에게서는 통일 당시의 경제상황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교할 때 현재 더 나빠졌다는 의견이 좋아졌다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는 반대로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약간 더 높았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 주민들 중 남녀를 불문하고 (또 남녀가 비슷한 정도로) 통일 당시보다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통일의 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스스로를 독일시민이라고 느끼지 못하면서도 구동독으로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구동독 지역 주민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구동독과 구서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계층귀속의식에 있어서 구동독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줄기는 했으나 서독에 비해 높은 노동계층 귀속의식을 보였고, 하층 귀속의식은 크게 증가했다(1992년 4%에서 2010년 14%, 서독지역은 현재 5%). 반면에 서독주민들은 중산층귀속의식에서 구동독 지역과 큰 차이로 앞섰는데, 특히 중상층/상층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매우 컸다.

결국 구동독 주민의 불안정한 회색정체성은 통일 독일의 하층민을 형성하게 되리라는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불안이 더 클 것이고, 또 이런 불안은 취업기회 및 학력과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통일로 인한 구동독 여성들의 지위변화를 종합하면, 1) 평균적으로는 여성 노동시장 통합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악화, 2) 사회통합의 양상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3)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는 일/가족 양립방식의 다양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분

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VI. 결론: 독일통일을 계기로 본 여성의 사회적 통합 제고 방안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라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구서독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보육서비스 부족문제로서, 여성들 뿐 아니라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통일 직후 구동독 공보육시설의 폐쇄 가능성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구서독 사회에서 70년대 이후 가족관계에서 개인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 개인주의로 가족의 결속력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구동독의 공보육시설은 사회주의의 유물로 보다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층 귀속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구동독 지역에서 가구소득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여성의 소득은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다. 여성들의 가구소득 기여분이 없다면 구동독 사회는 훨씬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탈산업사회화 추세에 따라 남성 직종 중심의 2차 산업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공보육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 통일 이후에도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구동독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서독이주의 '여성화'를 거론할 만큼 구동독 지역을 떠나는 여성들의 물결은 그치지 않았다. 특히 젊은 고학력 여성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전망을 찾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장 이주가 활발한 집단임이 밝혀졌다. 과거 구동독 시절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한층 더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노동권과 양육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가부장적인 서독의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통일을 원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생존권의 문제만도 아니고, 소비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영향만도 아니고, 현란한 서독 문명에 동참하고 싶은 허위의식의 문제만도 아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독립성 확보와 그것을 담보하는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공보육 지원은 그 기초로서 필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기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공보육 지원이라는 기초 위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노동시장통합 양상이 매우 역동적이고 또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직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또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문화적 압박과 부담, 폭력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젊은 여성들이 더 나은 '여성직종'의 기회를 찾아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는 까닭은 여성직종이 그녀들에게 더 자연스럽고 여성정체성에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적극적인 이유에서 여성직종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동서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성별 직종분리 구조 속에서 노동시장 참여 시 수반될 수 있는 문화적 부담이나 압박,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즉 보다 소극적인 이유에서 여성직종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욕이 높은 구동독 여성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동독에서 했던 것처럼) 보육제도 확충을 통해 여성들에게 시간자원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의 핵심적인 일자리에 여성들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실제로 통일 후 독일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구동서독 출신을 불문하고 젊은 여성들을 '비전통적 여성일자리'(특히 이공계)에 진출시키려

는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독일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구서독 지역에서는 보육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결혼기피, 출산기피, (초)단시간의 시간제 취업 선호 등 라이프스타일의 다변화를 통해 보육문제를 회피 또는 해결하는 실정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저조한 역설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인프라에 대한 개선은 아직까지도 향후 통일독일에서 여성들의 사회통합 양상을 결정지을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보육인프라 구축이라는 기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히 저소득층이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이, 특히 노후에, 공공부조대상자로서 국가복지에 의존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제 3부
문학작품을 통해 본 독일 통일과 여성의 의식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 출신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통일 이후 동독 여성들의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동독 여성 전체를 하나의 틀로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다양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독 여성의 경우에도 직장의 유무, 계층이나 교육정도, 세대에 따라 통일에 대한 경험도 다르며, 그에 따라 통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동독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고 사회주의 여성정책의 혜택을 누린 40대 이후의 세대와,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했던 30대, 그리고 20대 이하의 세대의 경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연령 혹은 세대는 의식의 차이를 낳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입장을 가진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각각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또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공통점은 어떤 것인지 분석할 것이다.

2. 전환기의 동독문학: 역사적 배경

통일은 독일 문학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독과 동독의 문학은 통일 이전에도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크리스타 볼프와 하이너 뮐러 같은 몇몇 동독 작가들은 서독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고 동서독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동서독 간에 '동질성' 내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로 동독과 서독의 문학체제는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 존재했다. 서독의 작가들은 자유로운 대신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었다면, 동독의 작가들은 검열과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대신 국가의 지원 하에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은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문학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고, 동독 작가들의 경우 검열이 사라짐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지원도 사라지고 냉혹한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 출신 작가들이 느끼는 좌절과 환멸은 이러한 현실적 조건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동독에서 문학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했다. 동독은 건국 초기부터 소위 "독서의 나라Leseland"를 표방했고, 이에 따라 문학에는 정치적, 교육적 임무가 부여되

어 당에 의해 장려되고 후원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학은 당의 일방적인 선전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종의 "대체여론Ersatzöffentlichkeit"으로서 동독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동독 작가들은 검열을 피해 우회적인 방식으로나마 체제를 비판하는 글들을 발표했다. 실제로 소위 '전환기'에 작가들이 동독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곧이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는 동독 주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동독 개혁을 주도한 지식인 세력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 이제 '인민'은 서독과의 즉각적인 통합을 요구했고 통일은 동독의 해체와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의 형식으로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일에 대해 동독의 작가들뿐 아니라 귄터 그라스와 같은 서독의 작가 역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이들의 호소는 반향을 얻지 못했고, 이들이 품었던 이상은 환멸로 변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개혁사회주의' 작가들은 '동서독 문학 논쟁 deutsch-deutscher Literaturstreit'에 휘말리며 정체성의 위기를 맞는다. 쟁점 중의 하나는 동독의 개혁에 앞장섰던 작가들이 지녔던, 동독 체제에 대한 이중적 입장에 초점에 맞춰진다. 말하자면 크리스타 볼프로 대표되는, 동독에 끝까지 남아 동독의 개혁에 앞장선 작가들의 경우 감시와 검열을 피해 체제에 저항하는 작품을 썼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의 지원을 받으며 특권을 누린 측면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수많은 작가들이 서독으로 추방당하거나 스스로 망명하거나, 아니면 동독에서 작품의 출판이 금지당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동독 시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들 작가들이 통일 이후 "체제의 희생자 내지 저항의 투사"로 나타나는 것에 비판의 화살이 가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구동독 작가들은 동독 시절에 누렸던 사회적 지위도 상실하고 문학적 평가마저 위기에 처하는 등, 자신의 과거와 이상이 모두 부정당하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논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동독 작가 전체가 아니라 동독의 '개혁사회주의'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 문학은 크게 세 세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세대는 제3제국 시기에 망명 작가로 활동하다 전후 동독에 정착한 작가들로, 베르톨트 브레히트, 안나 제거스, 요하네스 베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신념에 따라 동독을 선택하였고 동독의 건설에 앞장섰던 세대로서, 1950-60년대 반파시즘 문학,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을 주도했다.

제2세대 작가들은 유년기에 나치와 전쟁을 체험한 세대로, 크리스타 볼프, 하이너 뮐러 등의 개혁사회주의 작가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나치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에서 사회주의에 도달한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망명 세대에 대해 거의 맹목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등 동독 사회의 스탈린주의적 경향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유토피아'와 '현실 사회주의'의 모순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들은 1970-80년대 사회주의리얼리즘의 틀을 벗어나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의 삶을 천착한, 성찰적이고 뛰어난 문학적 질을 보이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동독 당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동독 체제를 비판하되 사회주의의 이상은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을 떠나지 않고 비판적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통일과 더불어 진정한 사회주의의 실현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리게 되자 이들이 '유토피아 상실의 멜랑콜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문학은 자본주의 논리만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대안적 가치에 대한 모색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결국 이들은 문학논쟁을 거치며 격렬한 비판을 당

했지만 살아남았고, 일방적 흡수 통일로 인한 통일 독일 사회의 다양한 모순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통해 통일 독일 문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독 현실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제3세대 작가들의 경우에는 제2세대 작가들과 같은 의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는 폐기되어야할 유물일 뿐으로, "암울하고, 부조리하고, 그로테스크한 일상"으로 그려진다. 이들에게서는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상실로 인한 안타까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사회주의 유토피아와 동독 현실간의 분열을 조롱하고 비판하거나 통일 독일의 현실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묘사한다. '동독문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2000년대 들어 등단한 신세대 작가들에게서도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동독이 꾸준히 문학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독 시절의 유년기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며 같은 세대 서독 출신 작가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은 동독 과거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무감, 혹은 분노를 갖지 않은 채 신세대 특유의 자유롭고 가벼운 글쓰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도 분명히 구별된다.

3. 통일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크리스타 볼프의『메데아』(1996)

크리스타 볼프는 그 자체가 동독 여성문학의 역사이다. 또한 통일 과정의 문학논쟁에서 보았듯이 '크리스타 볼프'는 통일 독일문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크리스타 볼프는 통일 과정에서 개혁사회주의 작가의 이상과 좌절을 보여준다.

통일 이후 씌어진 첫 장편소설『메데아. 목소리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애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남동생도 찢어 죽이고 연적도 독살하며 심지어 자식들마저 살해한 끔찍한 악녀로 알려져 있는 '메데이아'(희랍어, 독일어로는 메데아)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그런데 볼프의 소설 속 메데이아는 이러한 살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가부장적 권력의 유지를 위해 무고한 누명을 쓴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볼프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원래 치유의 능력을 지닌 여사제인 메데이아가 사악한 마녀로 낙인찍히고 추방당하게 되는 과정을 폭로한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의 상황과, 특히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된 작가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볼프는 통일 과정에서의 논란과 그 이후 동서독간의 갈등을 겪으며, 현재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에 낯선 것을 배제하려는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서 메데이아라는 '이방인' '여성'을 택한 것이다. 서구 문명은 문명/야만, 남성/여성을 대립시키는 가운데 유럽의 백인 남성을 최선의 척도로 삼아왔고, 따라서 낯선 이방인과 여성은 언제나 주변인 혹은 타자였다. 이러한 타자들은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너그러이 용인되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된다. 유럽의 역사에서 마녀사냥이나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메데이아』는 구동독의 스탈린주의적 체제, 서독 및 통일 독일의 물질만능주의, 통일 이후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의 갈등(오씨Ossi 대 베씨Wessi) 문제 등, 동독과 서독, 그리고 통일 독일의 현실에 대한 볼프의 문학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들을 저주하는 것. […] 나, 메데아는 너희를 저주한다.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내게 어울리는 세계, 그런 시대가 있을까. 물어볼 이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대답이다.

Was bleibt mir. Sie verfluchen. […] Ich, Medea, verfluche euch.

Wohin mit mir. Ist eine Welt zu denken, eine Zeit, in die ich passen würde. Niemand da, den ich fragen könnte. Das ist die Antwort." (236)

이러한 메데이아의 목소리에서 끝까지 사회주의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어디서도 그 이상을 실현할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동독 개혁사회주의 작가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다.

4. 동독에 대한 과거 청산 작업: 모니카 마론의 『조용한 거리 6번지』(1991)

모니카 마론Monika Maron은 1941년생으로, 크리스타 볼프가 유년기에 나치와 전쟁을 경험한 제2세대 작가라면, 그녀는 전후 세대, 곧 사회주의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사회주의는 더 이상, 추구해야할 이념이 아니라 기형적 현실일 뿐이었다. 특히 마론은 80년대 이후 줄곧 체제비판적인 작품을 발표해왔으며, 동독에서의 출판이 계속 거부당하자 결국 1988년 동독을 떠난, 동독의 체제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에 발표한 소설 『조용한 거리 6번지』는 통일 직후에 발표되었지만 통일 이전인 1980년대의 동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3세대에 속하는 여주인공(로잘린트)이 동독의 1세대 정치가인 베렌바움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과정을 통해 동독의 (잘못된) 역사와 대결하는 내용이다. 베렌바움으로 상징되는 동독은 거창한 역사적 명분하에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해왔으며 감시와 통제를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주인공은 그들에 의해 빼앗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베렌바움과 맞서 싸우며 그의 죽음을 바란다. 소설은 동독이 무너진 현재를 상징하듯 베렌바움의 장례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베렌바움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로잘린트의 회상 형식으로 서술된다. 로잘린트가 베렌바움의 회고록을 함께 써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1세대는 자신들의 기억, 자신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모든 세대에게 강요했다. 따라서 이 소설은 1세대가 만들어낸 역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베렌바움이 죽은 후인 지금 동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은 3세대의 몫으로 남는다. 동독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동독의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씌어져야하는 것이다.

5. 통일 독일에서의 새로운 여성정체성의 모색: 케어스틴 헨젤의 『운하에서 춤을』 (1994)

1961년 생인 케어스틴 헨젤(Kerstin Hensel)은 통일 당시 20대 후반으로,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동독의 마지막 세대 작가에 속한다. 1950년대 후반 혹은 60년대에 태어나 동독 몰락 직전, 혹은 통일 이후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 세대는 동독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최후의 '순수' 동독 세대die letzte 'echte' DDR-Generation"로 불린다. 이 세대의 작가들은 동독의 과거와 통일 독일의 현실에 대해 멜

랑콜리 대신 위트와 신랄한 아이러니를 통해 “이상과 현실, 체제와 인간 사이의 분열에 비판적인 칼날을 들이대고 치부를 파헤”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헨젤은 여성 특유의 시각으로 통일 이후 동독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모니카 마론이 동독의 1세대에 맞서는 딸-세대로서 개인의 삶을 질식시키는 동독의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청산을 시도하였다면, 헨젤의 경우 동독은 거대한 정치체제로서가 아니라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한 일상으로 나타난다. 헨젤은 자신과 같은 세대에게는 권력이 권력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헨젤에게 동독은 상실을 아쉬워할 유토피아도, 청산해야할 대상도 아니었다. 통일 역시 헨젤에게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된 삶일 뿐이다.

헨젤은 동독 시절 개개인의 삶을 지배했던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이 동독의 붕괴와 함께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통일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다. 다만 동독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자본과 언론이라는 형태로 좀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이다. 헨젤은 소설『운하에서 춤을』에서 동독 시절의 이야기와 현재 통일 독일의 현실을 번갈아 서술함으로써 두 체제의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억압적 메커니즘과 그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삶을 풍자적 글쓰기로 폭로한다.

주인공인 가브리엘라 폰 하슬라우는 동독에서 권위적인 아버지와 체제의 이데올로기만을 강요하는 학교, 그리고 슈타지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과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삶을 펼치는데 실패하고 국외자의 삶으로 내몰린다. 통일 후 노숙자로 살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쓰는 그녀에게 서쪽의 언론이 관심을 갖지만, 그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서독인들의 상투적 관념에 맞는 이야기, 즉 ‘동독체제와 통일 독일의 희생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관념을 입증할 이력뿐이다. 이처럼 그녀는 통일 독일에서도 정체성의 포기를 강요당한다. 소설은 동독 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주인공은 결국 고통스러운 ‘각성’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서독인들이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결국 주인공은 동독 시절뿐 아니라 통일 독일에서도 여성으로서도, 자유로운 작가로서도 자아를 실현하는데 실패한다. 이처럼 작가는 동독 출신 여성의 정체성 찾기의 과정과 그것의 실패를 통해 통일독일에서도 변화된 것이 없으며, 두 사회체제에서 모두 억압적 메커니즘과 권위적 상태가 지속됨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한편으로는 동독 체제와 통일 독일에서 고통을 겪는 여성의 생애로 읽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과정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자 특히 문학이나 여타 매체에서 통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각 세대별 의식은 남성작가와 여성작가를 막론하고 비슷하게 관찰된다.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의식에 있어서 성별보다는 세대에 따른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더욱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의 경우 통일 독일에서 동독 출신 여성이라는 이중의 소외된 위치를 통해 남성작가들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들은 세대에 따라 동독과 통일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지만, 동독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메커니즘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의 삶에 대해 천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룬 작품들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출간된 것으로서, 최초의 통일 독일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을 통해 통일이라는 역사적 충격에 대한 다양한 의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문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통일 직후의 예상과는 달리 2000년대 들어서도, 더구나 통일 독일의 첫 세대라고 불리는 197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작가들에게서도 '동독'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동독 시절의 유년기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작품은 같은 세대 서독 출신 작가들의 작품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크리스타 볼프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장편소설로는『메데이아』이후 14년만에 400여 쪽에 달하는 장편소설『천사의 도시, 또는 프로이트 박사의 오버코트Stadt der Engel oder The Overcoat of Dr. Freud』를 발표하였다. 이 자전적 소설은 나치와 사회주의 동독, 그리고 통일 독일의 자본주의 체제까지 모두 경험하였으며, 통일 과정에서 온갖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노작가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역사가 되어버린 동독의 삶에 대해 성찰한 작품이다. 이처럼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독'과 '동독문학'은 여전히 세대를 아우르며 통일 독일 문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동서독 통일 과정은 두 사회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통합과 새로운 사회적 원리의 형성에 관한 많은 고민을 낳았다. 젠더관계의 재규정은 핵심적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동독 여성들은 독일 통일의 최대 패자라고 일컬어졌다. 홍찬숙의 사회학적 연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를 확인케 해 준다. 그렇다고 서독 여성이 승자가 된 것도 아니다. 서독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별분업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서독의 여성관, 가족관을 이어받은 통일독일은 육아, 가사노동, 병자와 노인, 장애인 같은 약자의 돌봄 등을 모두 기본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하는 사회이다.[2)]

그렇다면 통일은 여성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단순화는 게으른 사고관습의 결과일 수도 있다. 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가 되었다. 아마 동독이 계속 존속하였다면 그녀가 일국의 집권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계층,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구 동독 여성의 삶의 모습은 다양화 혹은 양극화의 양상을 띤다. 이재원의 문학작품 연구에서 드러나듯, 패배자 동독 여성 일반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시도는 동독 여성들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관찰자의 편협한 고정관념의 산물일 수도 있다. 삶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인간은 주체적으로 대응한다. 독일 여성들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 과정은 그러한 주체들의 통합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이념의 면에서 본다면 구 동독의 여성정책을 역사의 쓰레기더미에 던질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두 독일 사회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사회적 요구가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되면, 사회와 여성의 관계에 관해 새로이 사유하는 사람들이 동독 시절의 여성정책을 다시 참고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경제 지배 아래 있는 사회 전체를 위한 새로운 교훈을 제공하게 될 지도 모른다. 다만, 그 교훈은 변증법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

2) 같은 글 112쪽.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변화분석을 통한 북한 농업개혁 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 **김관수**(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공동연구원 :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안동환(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목 차>

1. 서론 ····· 35

2. 체제전환국의 현황 ····· 37
2.1. 경제현황 ····· 37
2.2. 농업현황 ····· 38
2.3. 체제전환과정 평가 ····· 38
2.3.1. 자유화 지수 ····· 38
2.3.2. 체제전환지수 ····· 39
2.4. 토지사유화 ····· 40

3. 분석 모형 및 자료 ····· 41
3.1. 분석모형 ····· 41
3.1.1 체제전환국 농업효율성 분석모형 ····· 41
3.1.2 체제전환국 농업효율성 결정요인 분석모형 ····· 42
3.2. 분석자료 ····· 43
3.2.1. 투입 및 산출요소 ····· 43
3.2.2. 효율성 결정요인 ····· 45

4. 분석결과 ····· 46
4.1. 체제전환국 농업 생산성 변화 ····· 46
4.1.1. 생산함수 추정결과 ····· 46
4.1.2. 농업생산성 변화 ····· 47
4.2. 체제전환국 농업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 51

5. 요약 및 결론 ····· 54

참고문헌 ····· 58

<표 목 차>

<표 2-1> 체제전환국의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변화 추이 ····· 37
<표 2-2> 체제전환 이행정도 ····· 40
<표 2-3> 체제전환국의 토지 사유화 방식 ····· 41
<표 3-1> 체제전환국 산출 및 투입요소의 기초 통계량 ····· 45
<표 3-2> 비효율성 결정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 46
<표 4-1> 체제전환국의 생산함수 추정결과 ····· 47
<표 4-2> 연도별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 48
<표 4-3>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 49
<표 4-4>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 50
<표 4-5> 아시아(ASIA)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 50
<표 4-6> 체제전환국 농업 효율성 결정요인 추정결과 ····· 52
<그림 2-1> 체제전환국의 농업 GDP 변화 추이(1992=100) ····· 38

1. 서론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지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GDP의 급격한 감소와 높은 실업률,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등 이행침체(transition recession)가 체제전환국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에 내재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체제전환의 과정을 밟아오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가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은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농업은 사회·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 부문의 발전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농업과 산업 발전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며, 농업의 성장 잠재력은 산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은 계획경제체제에서 농업부문의 비효율성을 경험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왔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은 계획경제체제에서 농업부문의 비효율성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왔으며(Mathijs et al. 1997; Lerman et al. 2002), 사회주의국가의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이러한 만성적인 농업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러한 논의가 사실이라면 체제전환 이후 농업 생산성의 실질적 개선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농업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 장애요인이 존재할 경우, 농업 생산성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제전환국의 농업 생산성은 각 체제전환국의 초기조건, 부존자원, 체제전환 이행정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 체제전환국의 농업 생산성은 이행과정이나 부존자원 및 초기조건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Heath, 2003). 따라서 부존자원과 초기조건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정책이나 소유권의 배분방식 등에 따라 농업부문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체제전환국의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분석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선행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 주제는 토지개혁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농업생산과 생산성 변화, 사유화와 집단농장의 해체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CIS(독립국가연합 체제전환국)와 CEE(동유럽 체제전환국) 국가를 중심으로 체제전환국의 농업 생산성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Lee et al.(2004)과 Macours et al.(1999) 등이 있다. Lee et al.(2004)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EC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노동 및 토지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Macours et al.(1999)은 CEE 및 CIS 국가 이외에 아시아 체제전환국 포함하여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및 생산성 변화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들 선행연구들은 부분 생산성(partial productivity)에 국한되어 농업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토지 그리고 자본 등 전체 농업부문 투입을 함께 고려한 생산성 분석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Kim et al.(2006)은 CEE와 CIS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비모수적방법을 사용하여 농업 생산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Kim and An(2008)에서는 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까지 포함하여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분석기간이 200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생산성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은 오차항 전체를 비효율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의 크

기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의 경우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체제전환국 27개국(CIS 11개국[1], CEE[2] 11개국, ASIA[3] 5개국)을 대상으로 체제전환국의 농업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 아시아 체제전환국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에서 제외한다. 체제전환국 농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성의 결정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체제전환국의 농업개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모수적 분석방법인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한다.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모형의 장점은 각 분석단위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모형 접근법을 이용함으로써 프론티어 함수추정과 비효율성에 대한 외생변수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회귀분석 한다는 방법론적인 측면과 체제전환국 농업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1) CIS(독립국가연합) 체제전환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이 분석대상 국가이다.
2) CEE(동유럽) 체제전환국은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이 분석대상 국가이다.
3) 아시아 체제전환국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등 5개국이 분석대상 국가이다.

2. 체제전환국의 현황

2.1. 경제현황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을 시작할 당시 상이한 정치·경제적 초기조건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초기조건의 차이는 개혁방향의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개혁방향을 따르는가에 따라 개혁의 속도, 경로 및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표 2-1>은 체제전환국의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 것으로,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간에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물가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체제전환국의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CIS와 CEE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초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 초기에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가격자유화와 정부의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구매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며, 둘째는 정부의 긴축금융정책 및 긴축재정정책 실시로 자본공급 부족 현성아 나타나 국내투자를 저해하였기 때문이다(박준기 외, 2003).

아시아 지역의 체제전환국을 제외한 나머지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초기에 급격한 물가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은 3～5년간 연 1,200%대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경험하였다. 반면, 아시아 체제전환국은 연 40% 정도의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하였지만 다른 지역의 체제전환국과 같이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은 겪지 않았다.

<표 2-1> 체제전환국의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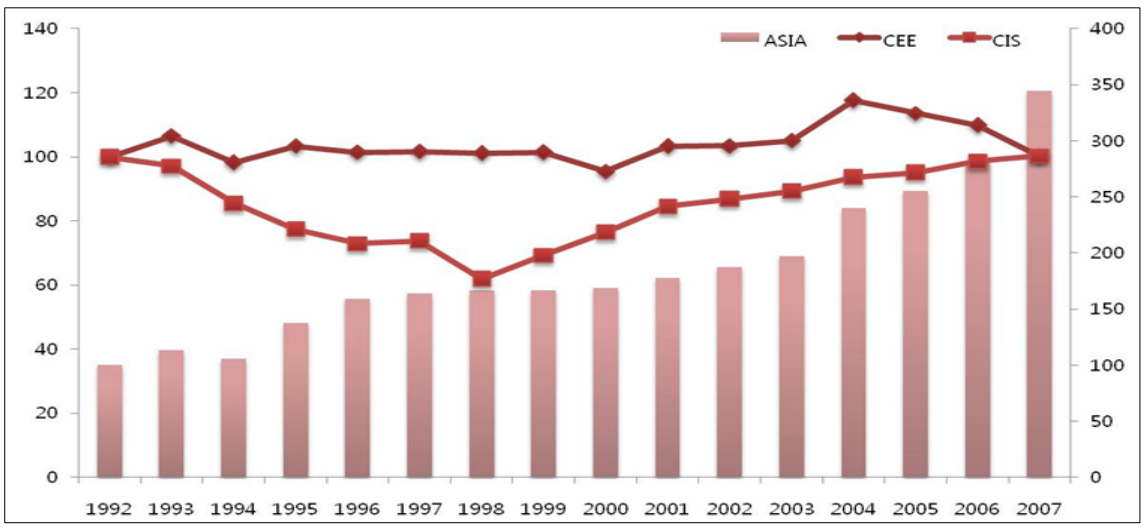
구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CIS	CEE	ASIA	CIS	CEE	ASIA
1992	-18.9	-10.6	4.7	1239.6	209.3	55.8
1993	-13.2	-1.7	6.3	2584.8	261.4	92.1
1994	-13.5	2.4	8.3	1716.3	54.7	20.7
1995	-5.7	4.9	8.0	337.9	25.3	24.3
1996	-0.6	3.5	6.8	183.2	27.7	9.4
1997	3.3	2.5	6.8	33.3	120.8	11.1
1998	3.5	4.1	5.2	25.8	15.2	19.4
1999	4.9	2.5	7.0	52.1	7.7	28.8
2000	7.9	5.1	6.1	35.1	9.2	10.7
2001	8.8	4.9	6.4	20.5	7.8	4.3
2002	7.5	4.6	6.7	14.5	5.5	4.2
2003	9.8	5.5	7.8	13.6	3.1	7.3
2004	9.9	6.1	9.0	12.8	4.5	9.5
2005	9.5	6.0	9.3	13.9	3.9	8.1
2006	11.0	7.0	9.5	13.7	4.0	10.5
2007	11.1	6.4	9.9	15.9	5.3	8.3
2008	6.8	2.7	7.7	22.3	8.1	14.4

자료: World Bank

2.2. 농업현황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초기에 일반적으로 농업 GDP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체제전환 이전의 농업 GDP로 회복되는 시점과 변화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CIS 체제전환국은 1992～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1999년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체제전환 이전의 농업 GDP를 회복하였다. CIS 체제전환국이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유는 계획경제하에서 지원되던 값싼 투입물과 노동력 공급의 중단, 물가 상승에 따른 투입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농업금융제도의 미비로 인한 영농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반면, CEE 체제전환국이 독립국가연합 체제전환국보다 체제전환 이전의 농업 GDP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체제전환국은 농업 GDP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농업 GDP는 1992년 농업 GDP의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체제전환국의 농업 GDP 변화 추이(1992=100)



자료: FAO, World Bank

2.3. 체제전환과정 평가

2.3.1. 자유화 지수

체제전환 이행과정에 대한 지표로는 de Melo et al.(1996)이 제시한 자유화지수(Liberalization Index: LI)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매년 발표되는 「Transition Report」의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ex)가 대표적이다. de Melo et al.(1996)가 제시한 자유화지수(LI)는 내부시장 요소(internal prices), 외부시장 요소(external markets), 민간부분진입 요소(private sector entry)로 구성되며, 각 요소에 대해 0.3, 03, 0.4 가중치를 곱한 후 계산된 값의 합을 자유화지수(LI)로 정의한다. 자유화지수(LI)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1은 개혁이 완료된 상태, 즉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완료

된 상태를 말한다. 내부시장 요소(I)는 국내 거래가격의 자유화 및 무역 독점의 폐지 등이 포함된 개념이며, 외부시장 요소(E)는 수출 통제 및 세금과 높은 수입 관세에 대한 중간 낮은 수입 관세의 철폐를 포함한 대외 무역 체제의 자유화를 포함한 부문을 말한다. 민간부분 진입 요소(P)는 소규모 사유화, 대규모 사유화, 은행 개혁이 포함된다.

2.3.2. 체제전환지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매년 「Transition Report」에서 체제전환국에 대한 8개 분야의 체제전환지표(Transition Indicators)를 토대로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체제전환지표는 최저 1점에서 최고 4+(4.33)점까지 개별점수에서 0.33점을 가감하여 총 11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9개 분야에 대한 가중치는 모두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어 체제전환지수는 최저 8.0에서 최고 38.97(4.33×9)점으로 산출된다. 체제전환지표는 ①소규모 민영화(Small-scale Privatization), ②대규모 민영화(Large-scale Privatization), ③기업 지배구조 및 구조조정(Governance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④가격자유화(price liberalization), ⑤무역·외환시스템(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⑥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⑦금융개혁(Banking Reform), ⑧증권시장 및 비 은행 금융제도(Securities Market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⑨인프라부문 개혁(Infrastructure Reform)로 구성된다[4].

Cerovic & Nojkovic(2009)은 EBRD의 체제전환지수를 이용하여 체제전환 이행정도를 퍼센트 개념으로 나타내었다. 0%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100%는 시장경제체제 전환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5].

<표 2-2>은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이행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체제전환 이행정도가 75% 이상인 국가는 체제전환국 22개국 중 7개국(31.8%)이며, 모두 CEE 체제전환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헝가리는 체제전환 정도가 87.9%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 이행정도가 55～75%인 국가는 10개국으로, CEE 체제전환국에 속하는 알바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이 CIS 체제전환국에 속한다. CIS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이행속도가 CEE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이행속도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

4) 인프라부문 개혁(Infrastructure Reform)을 제외한 일반적인 체제전환지표(Overall Transition Indicators)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개 분야에 대하여 최저 1점에서 최고 4.33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인프라부문 개혁은 철도, 전력, 도로, 통신, 용수·폐수 등 5개 부문의 인프라 개혁지표(Infrastructure Reform Indicators)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등급을 정한다.

5) EBRD의 체제전환지수에서 9점을 뺀 값을 29.97로 나눈 후 100을 곱해주면 된다.

<표 2-2> 체제전환 이행정도

CIS	체제전환 지수	체제전환 정도(%)	CEE	체제전환 지수	체제전환 정도(%)
아르메니아	27.99	63.36	알바니아	26.66	58.92
아제르바이잔	23.67	48.95	불가리아	31.34	74.54
벨로루스	16.66	25.56	크로아티아	31.66	75.61
그루지아	27.66	62.26	체코	34.32	84.48
카자흐스탄	27.01	60.09	에스토니아	35.33	87.85
키르키즈스탄	26.33	57.82	헝가리	35.55	87.85
러시아	27.33	61.16	라트비아	32.66	78.95
타지키스탄	21.33	41.14	리투아니아	33.32	81.15
투르크메니스탄	11.67	8.91	폴란드	33.99	83.38
우크라이나	27.00	60.06	루마니아	30.67	72.31
우즈베키스탄	19.35	34.53	슬로베니아	30.33	71.17
평균	23.27	47.62	평균	32.35	77.84

자료 : Cerovic & Nojkovic(2009)

2.4. 토지사유화

체제전환국의 토지개혁은 농업 생산 효율성과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사유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토지와 생산 자본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은 농업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Csaki and Lerman, 1996). 또한, 토지개혁과 사유화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개혁에 관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분배 효과에 대한 정치경제적 고려가 토지개혁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시 된다고 주장하였다(Swinnen, 1997).

동유럽(CEE)과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의 토지개혁에는 역사적 정의의 대안(Historical Justice Option)과 사회적 정의의 대안(Social Equity Option)이라는 상충적인 목표가 존재한다. 역사적 정의의 대안(Historical Justice Option)은 이전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정의의 대안(Social Equity Option)은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알바니아는 사회적 정의의 대안(Social Equity Option)에 준거하여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3%의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대신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CEE 국가와 CIS 국가의 토지사유화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2-3>와 같다. 토지 사유화 방식에는 토지의 반환(반환, 보상), 분배(유상분배, 무상분배), 매각(매각, 임대, 임대 후 매각)으로 나눌 수 있다. 반환 방식은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이 이루어진다. 분배 방식은 토지를 농장노동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유상분배와 무상분배로 나눌 수 있다. 매각은 일종의 유상분배로 볼 수 있으나 농장노동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농민이나 농업기업이 토지를 경작하기를 원할 때 국가로부터 매각받거나 임대받아 경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양호, 2002).

<표 2-3> 체제전환국의 토지 사유화 방식

구분	반환	분배		혼합 또는 예외
		현물토지	증권	
CIS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CEE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알바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자료: Lerman (1999)

3. 분석 모형 및 자료

3.1. 분석모형

3.1.1 체제전환국 농업효율성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 농업 효율성 측정을 위해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을 적용해보기로 한다. 확률 프론티어 개념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형은 Aigner, Lovell and Schmidt(1977)와 Meeusen and Broeck(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 여러 연구에서 모형이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6].

패널자료의 경우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 $Y_{it} = f(X_{it},\beta)\exp(v_{it} - u_{it}), \quad i = 1, 2, ..., N, \quad t = 1, 2, ..., T$

여기서 Y_{it}는 t시기(t=1, 2, ... T)에 i번째 체제전환국(i=1, 2, ... N)의 산출물을 나타내며 $f(\cdot)$은 생산기술, 그리고 X_{it}와 β는 투입요소의 벡터와 계수벡터를 나타낸다. v_{it}는 측정오차나 프론티어 함수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지 않는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는 확률적 오차항으로 $v_{it} \sim N(0,\sigma_v^2)$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며, u_{it}와는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u_{it}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으로, 0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

6) Aigner et al.(1977)와 Meeusen et al.(1977)이 제시한 모형은 주로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으나 이후 Kumbhakar(1990), Bettesse and Coelli(1992) 등에 의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율성의 동태적 패턴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 (1)의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세 개의 투입물(노동, 자본, 토지)과 두 개의 오차항(error term), 그리고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초월대수 생산함수 형태를 이용한다.

식 (2) $\ln Y_{it} = \beta_0 + \sum_j \beta_j \ln x_{jit} + \beta_T t + \beta_{TT} t^2 + \sum_j \sum_l \beta_{jl} \ln x_{lit} \ln x_{jit}$
$+ \sum_j \beta_{Tj} t \ln x_{jit} + v_{it} - u_{it}$,
$i = 1, 2, 3, ..., N, \quad t = 1,2,3, ..., T, \quad j, l = L, A, K$

위 식에서 Y는 산출물, x는 생산요소, 하첨자 i와 t는 각각 체제전환국($i = 1,2,.... N$)과 시간($t = 1,2,.... T$), 그리고 하첨자 j와 l은 생산요소[j,l = 노동(L), 토지(A), 자본(K)]를 나타낸다.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u_{it}는 $N(\mu, \sigma^2)$인 정규분포를 양(+)에서 절단하는 독립적이며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Battese and Coelli(1992)을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식 (3) $u_{it} = u_i \eta = u_i \exp(-\eta[t - T])$

이 식에 의하면, i번째 체제전환국의 t년도에서의 기술적 비효율성 u_{it}는 마지막 년도(T)까지 남은 기간 $-(t - T)$, 기술적 비효율성의 변화율 η, 그리고 표본기간의 마지막 년도에서의 i번째 체제전환국의 기술적 비효율성 u_i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η가 양일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며, 음일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은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의미한다.

체제전환국 i의 시점 t에서 기술적 효율성(TE_{it})는 실제 생산량과 기술적 비효율성이 없을 경우의 최대 생산가능량간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는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의 추정결과 얻어진 두 오차항($v_{it} - u_{it}$)으로부터 $\exp(-u_{it})$의 조건부 기대치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4)과 같이 계측될 수 있다.

식 (4) $TE_{it} = E[\exp(u_{it}) \mid e_{it}], \quad e_{it} = v_{it} - u_{it}$

3.1.2 체제전환국 농업효율성 결정요인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Battese and Coelli(1995)의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u_{it}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으로 평균이 $z_{it}\delta$이며, 분산이 σ_u^2인 정규분포에서 0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z_{it}와 δ는 각각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와 추정계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이 특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 u_{it}는 다음과 정의할 수 있다(Battese and Coelli, 1995).

식 (5) $u_{it} = z_{it}\delta + w_{it}$.

위의 식에서 확률변수 w_{it}는 $-z_{it}\delta$에서 절삭된 정규분포를 이루는데 이는 $w_{it} \geq -z_{it}\delta$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정들은 u_{it}가 비음 부분이 절삭된 정규분표($N(z_{it}\delta, \sigma_u^2)$)를 따른다는 가정과 일치한다.

식 (1)을 추정하려면 생산함수$f(X_{it},\beta)$의 구체적인 함수 형태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함수형태인 트랜스로그 생산함수(Translog production function)를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설명변수에는 노동(L), 토지(A), 자본(K)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산출물은 농업 GDP(Y)로 선정하였다. 위의 식 (6)에 정의한 트랜스로그 생산함수 형태는 규모에 대한 수확과 대체가능성에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비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추정식은 식(7)와 같다.

식 (6) $$\ln Y_{it} = \beta_0 + \sum_j \beta_j \ln x_{jit} + \beta_T t + \beta_{TT} t^2 + \sum_j \sum_l \beta_{jl} \ln x_{lit} \ln x_{jit} + \sum_j \beta_{Tj} t \ln x_{jit} + v_{it} - u_{it},$$
$$i = 1, 2, 3, ..., N, \quad t = 1, 2, 3, ..., T, \quad j, l = L, A, K$$

식 (7) $$U = \delta \sum_{j=1}^{11} Z_{jit} + W_{it}.$$

여기서 $Z_j\,(j = 1, 2, 3, ..., 11)$는 비효율성 결정요인들로서 Z_1은 개혁이전 1인당 소득, Z_2는 GDP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Z_3은 자유화지수, Z_4는 CMEA 무역의존도, Z_5는 계획경제존속기간, Z_6은 외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Z_7은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포함하였다. $Z_8 \sim Z_9$은 토지 사유화 방식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분배(distribution)를 참조집단으로 설정), Z_{10}은 국가 그룹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을 참조집단으로 설정), Z_{11}는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추정은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추정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FRONTIER 4.1이다[7].

3.2. 분석자료

3.2.1. 투입 및 산출요소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농업 효율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FAO와 UN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CEE 11개국, CIS 11개국, 아시아 5개국 등 총 27개국이며, 분석기간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개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은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11개국이며,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11개국 이다. 아시아 체제전환국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5개국이다.

---

7) 추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elli(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종속변수인 산출물의 경우 1990년 불변가격으로 표시된 농업 GDP를 사용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 Kim and An(2008) 등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토지, 노동, 자본(트랙터 수)을 사용하였다. 노동투입변수에는 농업, 임업, 수렵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인구를 사용하였다. 한편, 자본투입변수에는 농업에 이용되는 모든 트랙터 수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차륜형 트랙터와 궤도형 트랙터는 포함되지만 정원용 트랙터는 제외된다. 토지투입변수에는 경지면적(arable land)[8],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permanent crops)[9], 그리고 영구 목초지(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10] 면적의 합이 사용되었다.

아래 <표 3-1>는 분석에 사용된 산출 및 투입요소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출요소인 농업 GDP를 살펴보면 아시아 체제전환국은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농업 GDP가 매우 높으며,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은 자본 투입량을 제외한 농업 토지와 노동 투입량이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은 국가 간의 편차가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의 경우, 투입요소의 상당부분이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경지면적(arable land)은 단기재배작물의 재배지역(2모작의 경우 1회만 계산됨), 일시적 목초지, 텃밭 그리고 일시적인 휴경지(5년 이하)를 포함된다.

9)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permanent crops)은 장기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코코아, 커피, 고무 등과 같이 수확후에 재파종을 할 필요성이 없는 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10) 영구 목초지(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료작물이 재배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표 3-1> 체제전환국 산출 및 투입요소의 기초 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산출물	농업 GDP (백만 USD)	CIS	9,441.59	20,099.36
		CEE	3,123.36	3,170.70
		ASIA	32,098.56	62,687.05
투입물	토지(Land) (1,000ha)	CIS	561,950	7,062.8
		CEE	57,415	2,826.2
		ASIA	676,893	9,900.3
	농업 경제활동인구 (1,000명)	CIS	19,597	1,953.2
		CEE	8,068	1,345.7
		ASIA	525,684	8,033.9
	자본(Capital) (tractor : 1,000대)	CIS	1,712	445.0
		CEE	2,097	213.9
		ASIA	1,147	428.7

자료 : FAO(2009), WDI(2009)

3.2.2. 효율성 결정요인

체제전환국의 농업효율성 차이는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초기조건과 경제개혁(사유화, 자유화, 금융체제의 도입 등), 토지 사유화 방식 등의 요인에 의해 기인한다. Kim and An(2008)은 De Melo et al.(1997)이 제시한 초기조건을 사용하여 초기조건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혁이전 1인당 소득, 도시화율, 천연부존자원, 개혁이전 경제성장율 등과 같이 경제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억제된 인플레이션, CMEA 무역의존도, 외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등과 같이 거시경제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De Melo et al.(1997)가 제시한 개혁이전 1인당 소득, GDP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리적 위치, CMEA 무역의존도, 계획경제존속기간, 억제된 인플레이션, 외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을 고려하였다.

경제개혁정도는 자유화지수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De Melo(1996)가 제시한 자유화지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발표하는「Transition Report」의 체제전환지표(Transition Indicators)를 이용하여 추정한 자유화지수(LI)를 사용하였다.

<표 3-2> 비효율성 결정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구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정책적 요인	자유화 지수(δ_3)[11]	-	1.891	0.583
초기조건 (경제발전)	개혁이전 1인당 소득(δ_1)	달러	5643.682	2152.106
	GDP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δ_2)	%	44.182	8.466
초기조건 (거시경제 왜곡정도)	CMEA 무역의존도(δ_4)	%	21.200	12.220
	계획경제존속기간(δ_5)	년	58.545	13.525
	외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δ_6)	%	1283.545	762.784
	억제된 인플레이션(δ_7)	%	19.168	10.626

자료 : de Melo et al.(1997), EBRD (2009)

4. 분석결과

4.1. 체제전환국 농업 생산성 변화

4.1.1. 생산함수 추정결과

<표 4-1>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이용하여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체제전환국 27개국의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이 결과로부터 기술적 비효율성의 존재 여부와 그 형태에 대해 가설검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체제전환국은 생산변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효율성 값은 항상 1이 된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12]을 실시하였다. 귀무가설($H_0 : \gamma = \mu = \eta = 0$)은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LR을 계산하면 $LR = -2 \times (-302.01 - 119.59) = 843.2$ 이다. χ_3^2의 1% 유의수준 통계량은 11.34이기 때문에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이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자본, 시간, 노동과 자본의 교차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1) de Melo et al.(1996)가 제안한 자유화 지수(LI)는 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자유화 지수에 대응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지표(Transition Indicators)에 de Melo et al.(1996)가 제안한 자유화 지수의 가중치(내부시장 요소(I) 0.3, 외부시장 요소(E) 0.3, 민간부분진입 요소(P) 0.4)를 곱해 구한 추정값을 구하였다.

12) LR 검정통계량은 $\lambda = -2[L(H_0) - L(H_1)]$로 정의되며 $L(H_0)$와 $L(H_1)$은 귀무가설과 대리가설의 로그 우도값을 나타낸다. 이 검정통계량은 근사적으로 귀무가설에서 0으로 가정한 모수들의 수만큼 자유도를 갖는 χ^2분포를 따른다.

<표 4-1> 체제전환국의 생산함수 추정결과

구분			추정치	t-값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	β_0	constant	17.7605 ***	13.9334
	β_L	lx1(labor)	-0.5312 ***	-3.3669
	β_K	lx2(capital)	0.1319	1.0328
	β_A	lx3(land)	0.5906 ***	1.8415
	β_T	t	-0.0056	-0.3325
	β_{LL}	lx1*lx1	-0.1192 ***	-4.7488
	β_{KK}	lx2*lx2	-0.0268 ***	-3.3608
	β_{AA}	lx3*lx3	-0.1769 ***	-6.3192
	β_{TT}	t*t	0.0019 ***	4.6943
	β_{LK}	lx1*lx2	-0.0170	-1.2821
	β_{LA}	lx1*lx3	0.2920 ***	6.2281
	β_{KA}	lx2*lx3	0.0833 ***	5.6076
	β_{TL}	t*lx1	-0.0049 ***	-3.2802
	β_{TK}	t*lx2	-0.0040 ***	-2.8590
	β_{TA}	t*lx3	0.0085 ***	5.1033
$\sigma_s^2 = \sigma_v^2 + \sigma^2$			1.2134	1.2519
$\gamma = \sigma^2 / \sigma_s^2$			0.9804 ***	61.3821
μ			0.3028	0.2980
η			-0.0038 *	-1.4927
$\ln L$				119.5943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4.1.2. 농업생산성 변화

아래의 <표 4-2>는 체제전환국의 연도별 농업 생산 효율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13]. 분석기간 동안 체제전환국의 평균 농업생산 효율성은 0.4736로서 최대 생산의 47.4% 정도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 그룹은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으로 54.91%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아시아(0.5245), 독립국가연합(0.3473)순이다.

13) 모수적 방법(SFA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DEA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체제전환국 농업의 기술적 효율성 값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만의 서열상관계수(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DEA 방법과 SFA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기술적 효율성 값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1992년을 제외하고 0.0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FA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기술적 효율성 값과 DEA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기술적 효율성 값에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연도별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구분	독립국가연합(CIS)	동유럽(CEE)	아시아(Asia)	평균
1992	0.3548	0.5431	0.5337	0.4772
1993	0.3538	0.5576	0.5325	0.4813
1994	0.3528	0.5564	0.5313	0.4802
1995	0.3518	0.5553	0.5300	0.4790
1996	0.3508	0.5541	0.5288	0.4779
1997	0.3498	0.5530	0.5276	0.4768
1998	0.3488	0.5518	0.5264	0.4756
1999	0.3478	0.5506	0.5251	0.4745
2000	0.3468	0.5495	0.5239	0.4734
2001	0.3458	0.5483	0.5227	0.4722
2002	0.3448	0.5472	0.5214	0.4711
2003	0.3438	0.5460	0.5202	0.4700
2004	0.3428	0.5448	0.5190	0.4689
2005	0.3418	0.5437	0.5177	0.4677
2006	0.3408	0.5425	0.5165	0.4666
2007	0.3398	0.5413	0.5153	0.4655

<표 4-3>은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의 효율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로 96.3%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0.8175), 우크라이나(0.4820), 벨라루스(0.4374)순이다.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타지키스탄(0.0664), 투르크메니스탄(0.0705), 키르기스스탄(0.1454), 아르메니아(0.1682), 아제르바이잔(0.1797) 순으로 이들 지역은 20%미만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 국가별 효율성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기술적 비효율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3> 독립국가연합(CIS)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구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1992	0.1769	0.1887	0.4478	0.2669	0.8222	0.1536	0.9642	0.0717	0.0760	0.4922	0.2429
1993	0.1757	0.1874	0.4464	0.2655	0.8216	0.1525	0.9641	0.0709	0.0752	0.4908	0.2416
1994	0.1745	0.1862	0.4450	0.2642	0.8210	0.1514	0.9639	0.0702	0.0745	0.4895	0.2403
1995	0.1734	0.1850	0.4436	0.2628	0.8203	0.1503	0.9638	0.0695	0.0737	0.4881	0.2390
1996	0.1722	0.1838	0.4422	0.2615	0.8197	0.1492	0.9637	0.0688	0.0730	0.4868	0.2376
1997	0.1710	0.1826	0.4408	0.2601	0.8191	0.1481	0.9635	0.0681	0.0722	0.4854	0.2363
1998	0.1699	0.1814	0.4394	0.2588	0.8185	0.1470	0.9634	0.0674	0.0715	0.4841	0.2350
1999	0.1687	0.1802	0.4381	0.2574	0.8178	0.1459	0.9633	0.0667	0.0708	0.4827	0.2337
2000	0.1676	0.1790	0.4367	0.2561	0.8172	0.1448	0.9631	0.0660	0.0701	0.4814	0.2324
2001	0.1664	0.1779	0.4353	0.2547	0.8166	0.1437	0.9630	0.0653	0.0693	0.4800	0.2311
2002	0.1653	0.1767	0.4339	0.2534	0.8159	0.1427	0.9628	0.0646	0.0686	0.4787	0.2298
2003	0.1641	0.1755	0.4325	0.2521	0.8153	0.1416	0.9627	0.0639	0.0679	0.4773	0.2285
2004	0.1630	0.1743	0.4311	0.2507	0.8146	0.1405	0.9626	0.0632	0.0672	0.4759	0.2272
2005	0.1618	0.1731	0.4297	0.2494	0.8140	0.1395	0.9624	0.0626	0.0665	0.4746	0.2259
2006	0.1607	0.1720	0.4283	0.2480	0.8134	0.1384	0.9623	0.0619	0.0658	0.4732	0.2246
2007	0.1596	0.1708	0.4269	0.2467	0.8127	0.1374	0.9621	0.0612	0.0651	0.4718	0.2233
Mean	0.1682	0.1797	0.4374	0.2568	0.8175	0.1454	0.9632	0.0664	0.0705	0.4820	0.2331

<표 4-4>는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의 효율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크로아티아로 93.0%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체코(0.7075), 에스토니아(0.6903), 알바니아(0.6750)순이다.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헝가리(0.3036)와 리투아니아(0.3720)로 이들 지역은 40%미만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의 농업효율성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기술적 비효율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4>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구분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1992	0.6826	0.4456	0.9322	-	0.6977	0.3141	0.4516	0.3826	0.4098	0.5763	0.5385
1993	0.6816	0.4442	0.9319	0.7140	0.6967	0.3127	0.4503	0.3812	0.4083	0.5751	0.5372
1994	0.6806	0.4429	0.9317	0.7131	0.6957	0.3113	0.4489	0.3798	0.4069	0.5739	0.5360
1995	0.6796	0.4415	0.9314	0.7122	0.6948	0.3099	0.4475	0.3784	0.4055	0.5726	0.5347
1996	0.6786	0.4401	0.9311	0.7112	0.6938	0.3085	0.4461	0.3770	0.4041	0.5714	0.5334
1997	0.6776	0.4387	0.9309	0.7103	0.6928	0.3071	0.4447	0.3755	0.4027	0.5702	0.5321
1998	0.6766	0.4373	0.9306	0.7094	0.6918	0.3057	0.4433	0.3741	0.4013	0.5689	0.5308
1999	0.6755	0.4359	0.9304	0.7084	0.6908	0.3043	0.4419	0.3727	0.3999	0.5677	0.5295
2000	0.6745	0.4345	0.9301	0.7075	0.6899	0.3029	0.4405	0.3713	0.3985	0.5665	0.5282
2001	0.6735	0.4331	0.9299	0.7065	0.6889	0.3015	0.4391	0.3699	0.3970	0.5652	0.5269
2002	0.6725	0.4317	0.9296	0.7056	0.6879	0.3001	0.4377	0.3684	0.3956	0.5640	0.5256
2003	0.6714	0.4303	0.9293	0.7047	0.6869	0.2988	0.4364	0.3670	0.3942	0.5627	0.5243
2004	0.6704	0.4289	0.9291	0.7037	0.6859	0.2974	0.4350	0.3656	0.3928	0.5615	0.5230
2005	0.6694	0.4275	0.9288	0.7027	0.6849	0.2960	0.4336	0.3642	0.3914	0.5602	0.5217
2006	0.6683	0.4261	0.9286	0.7018	0.6839	0.2946	0.4322	0.3628	0.3900	0.5590	0.5204
2007	0.6673	0.4247	0.9283	0.7008	0.6829	0.2932	0.4308	0.3614	0.3886	0.5577	0.5190
Mean	0.6750	0.4352	0.9302	0.7075	0.6903	0.3036	0.4412	0.3720	0.3992	0.5671	0.5288

<표 4-5>는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농업 효율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캄보디아로 80.0%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0.5268), 몽골(0.5054) 순이다.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0.3905)와 라오스(0.3994)로 이들 지역은 40%미만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아시아(ASIA)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구분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1992	0.8055	0.4011	0.4100	0.5153	0.5365
1993	0.8048	0.3997	0.4086	0.5140	0.5352
1994	0.8042	0.3983	0.4072	0.5127	0.5339
1995	0.8035	0.3969	0.4058	0.5113	0.5326
1996	0.8028	0.3955	0.4044	0.5100	0.5313
1997	0.8021	0.3941	0.4030	0.5087	0.5300
1998	0.8015	0.3926	0.4015	0.5074	0.5287
1999	0.8008	0.3912	0.4001	0.5060	0.5274
2000	0.8001	0.3898	0.3987	0.5047	0.5261
2001	0.7994	0.3884	0.3973	0.5034	0.5248
2002	0.7987	0.3870	0.3959	0.5021	0.5235
2003	0.7980	0.3856	0.3945	0.5007	0.5222
2004	0.7973	0.3841	0.3931	0.4994	0.5209
2005	0.7966	0.3827	0.3916	0.4980	0.5196
2006	0.7959	0.3813	0.3902	0.4967	0.5183
2007	0.7952	0.3799	0.3888	0.4954	0.5170
Mean	0.8004	0.3905	0.3994	0.5054	0.5268

4.2. 체제전환국 농업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표 4-6>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이용하여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시아 체제전환국을 제외한 22개국의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와 비효율성모델을 동시에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14]. 먼저 각 추정계수들을 분석하기 전에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검정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하였다. 귀무가설($H_0 : \gamma = \delta_0 = \delta_1 = \delta_2 = ... = \delta_{11} = 0$)은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LR을 계산하면 $LR = -2 \times (-288.844 - (-112.60)) = 352.487$ 이다. χ^2_{13}의 1% 유의수준 통계량은 27.688이기 때문에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이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제전환국의 농업에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상적인 평균 생산함수(average 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함을 의미한다. 평균 생산함수 추정의 경우, 생산에 있어서 존재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무시함으로써 실제 생산함수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FA는 오차항을 확률변수와 비효율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γ는 오차항에서 비효율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γ가 1에 가까울수록 비효율로 인한 오차가 커지고 확률변수 v_{it}는 0에 가까워진다. <표 4-6>를 살펴보면 모형에서 $\hat{\gamma}$의 값은 0.8766으로 1에 가까우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제전환국의 농업 생산성을 추정하는데 있어 비효율로 인한 오차가 오차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이면 비효율성 잔차인 u_{it}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비효율성 증가 요인으로 해석되고, 음수인 경우는 비효율성 감소의 요인으로 해석된다.

비효율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정책적 요인과 초기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개혁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화 지수(LI)와 토지 사유화 방식은 정책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에 해당된다. 먼저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개혁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화 지수(δ_3)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경제로의 경제개혁이 잘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생산이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Fisher et al.(1996)는 경제개혁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자유화 지수(LI)를 사용하여 시장 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Sachs(1996)는 EBRD의 체제전환지표를 사용하여 경제성장과 시장 자유화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정책적 요인)과 거시경제적 실적(경제성장률)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시장경제요소 도입의 성과지표(자유화지수, 체제전환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어나며, 그 중 일부는 농업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져 체제전환국의 농업 생산 기술효율성은 향상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4)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경우 농업 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4-6> 체제전환국 농업 효율성 결정요인 추정결과

구분			추정치	t-값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	β_0	constant	33.4676 ***	22.6882
	β_L	lx1(labor)	4.1660 ***	5.3579
	β_K	lx2(capital)	-4.1295 ***	-9.5585
	β_A	lx3(land)	-1.7058 ***	-4.6913
	β_T	t	0.0784 *	1.4873
	β_{LL}	lx1*lx1	-0.3507 ***	-7.4817
	β_{KK}	lx2*lx2	0.2432 ***	7.5821
	β_{AA}	lx3*lx3	-0.3011 ***	-11.3431
	β_{TT}	t*t	0.0015	1.1006
	β_{LK}	lx1*lx2	-0.4930 ***	-7.3720
	β_{LA}	lx1*lx3	0.6857 ***	8.8696
	β_{KA}	lx2*lx3	0.2738 ***	6.8706
	β_{TL}	t*lx1	-0.0278 ***	-3.4929
	β_{TK}	t*lx2	-0.0216 ***	-4.2057
	β_{TA}	t*lx3	0.0384 ***	4.5894
비효율성 결정요인	δ_0	constant	-0.3448	-0.3584
	δ_1	개혁이전 1인당 소득	-0.0006 ***	-8.8049
	δ_2	GDP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0.0063	0.4145
	δ_3	자유화 지수	-0.4819 **	-1.9928
	δ_4	CMEA 무역의존도	4.4117 ***	6.0433
	δ_5	계획경제존속기간	-0.0027	-0.1126
	δ_6	외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0.0016 *	1.5300
	δ_7	억제된 인플레이션	-0.0291	-0.6125
	δ_8	토지 사유화 방식 더미(반환)	-1.1705 *	-1.6323
	δ_9	토지 사유화 방식 더미(기타)	1.2151 *	1.3085
	δ_{10}	국가 그룹 더미(cis)	1.6033 **	2.0820
	δ_{11}	지리적 위치 더미(good)	3.2868 ***	8.4876
$\sigma_v^2+\sigma_u^2$			0.2419 ***	4.9876
$\gamma=\sigma_u^2/(\sigma_v^2+\sigma_u^2)$			0.8766 ***	41.3786
$\ln L$				-112.60
LR test				352.487(χ_{13}^2)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토지 사유화 방식을 나타내는 더미변수(δ_9)를 살펴보면, 반환하는 경우가 분배하는 경우에 비해 비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주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사유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분배 방식은 사적소유화를 견지한다는 점에서는 반환 방식과 유사할 수 있으나, 농민의 생산 및 경영능력 또는 설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분배 방식은 반환 방식에 비해 사유화 속도가 느려 일반적으로 농업 효율성의 하락을 초래한다. Macours et al.(1997)은 토지 사유화는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환방식이 분배방식에 비해 사유화 속도가 빠르므로 농업 생산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MEA[15] 무역의존도(δ_4)는 거시경제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CMEA 무역의존도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장경제의 경우 무역은 시장상황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매개로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적 차원의 협력은 그러한 거래를 위한 규칙을 정하거나 계약의 준수를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지는 시장기능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계획경제에서는 국제무역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 모두 독점의 주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가격조정, 자원배분 기능 등 시장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CMEA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의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시경제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외환 암시장 프리미엄(δ_6)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 암시장 프리미엄이 클수록 즉 무역자유도가 낮을수록 농업 생산의 비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개혁이전의 1인당 소득(δ_1)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계수는 -0.0006으로 농업 생산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제전환기간 동안에는 경제체제가 불안정하고, 사적 소유권이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 CEM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기구로 1949년 창설되었다. 이들 회원국들은 1955년 군사협력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체제전환들의 시장경제로의 편입 이후 농업 생산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생산성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농업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제전환국 27개국(CIS 11개국, CEE 11개국, ASIA 5개국) 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업 효율성 계측하고, 아시아 체제전환국을 제외한 22개국을 대상으로 농업 효율성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의 추정결과 자본, 시간, 노동과 자본의 교차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 효율성에 대한 결정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초기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개혁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화 지수(LI)는 정책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자유화 지수(LI)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경제로의 경제개혁이 잘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생산이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 사유화 방식을 살펴보면 반환하는 경우가 분배하는 경우에 비해 비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 이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주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사유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면, 개혁이전 1인당 소득, CMEA 무역의존도,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CMEA 무역의존도, 외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거시경제의 왜곡정도가 클수록 농업 생산의 비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인 개혁이전의 1인당 소득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2007년 체제전환국의 농업 효율성은 평균 0.4736으로 나타나 약 52.64% 정도의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전환국별로 분석한 결과 0.6이하의 기술적 효율성을 갖는 국가의 비율은 CIS(81.8%), CEE(63.6%), ASIA(80%)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CIS와 ASIA 국가들이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분석한 CIS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농업 효율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토대로 북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 사유화 방식을 분배(distribution)[16], 반환(restitution)[17], 기타[18]로 나누어 체제전환국의 농업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반환을 채택한 체제전환국의 농업 효율성 평균은 0.8258로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토지 사유화 방식으로 분배를 채택한 국가의 농업 효율성 평균은 0.4077로 전체 평균 0.585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반환을 통한 토지 사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 사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반환 방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6) 분배(distribution)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등 12개국이다(Lerman et al., 2004).

17) 반환(restitution)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5개국이다.

18) 기타방식은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5개국이다.

하지만 토지사유화 방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전환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초기조건에 따른 선택 가능한 정책적 범위의 판단이 필요하다. 토지사유화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환(반환, 보상), 분배(유상분배, 무상분배) 그리고 기타(매각, 임대, 임대 후 매각)이 있다. 우선 반환 방식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토지가 국공유화 되는 과정(토지개혁, 농업집단화)에 불법적 추진되었고, 원소유자를 가려낼 수 있는 공부(公簿)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둘째, 협동농장에 편입된 토지가 법적으로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이다. CEE 국가의 상당수는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현재 등기제도가 없으며, 토지개혁 과정에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폐기해 버렸기 때문에 당시의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적 기록(등기부등본, 토지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처럼 몰수토지와 협동농장소유토지의 처리에 있어서 반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의 토지사유화 방식을 분석결과를 반영한 반환 방식과 북한의 현실을 고려한 분배 및 기타(매각)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반환 방식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체제 확립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몰수된 토지를 당시 시점의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고, 당해 재산가치의 멸실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제3취득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환 방식은 법치주의에 부합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정의의 관념에 일치한다[19].

토지의 원소유자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몰수된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동독의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과 같이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전담기구는 몰수토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권리회복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몰수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토지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토지소유실태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1946년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몰수 대상자와 6.25전쟁으로 월남한 사람들과 자진 월북자 및 납북자들의 등기부상에 남아있는 토지소유실태에 관하여 남·북한 정부가 조사한 적이 없으며, 그 대상자가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에 그치고 있다(김갑열, 1997). 따라서 남·북한공동 토지소유실태 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명문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의 원소유자 반환 및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은 대안은 분배와 기타(매각)방식이다. 분배 방식은 농장노동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분배와 무상분배로 나눌 수 있다. 매각 방식은 일종의 유상 분배로 볼 수 있으나 농장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농민이나 농업기업이 토지 경작을 원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해 경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매각 방식은 분배를 통한 사유화에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북한은 많은 인구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토지 분배시 형평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미약하다. 따라서 농장노동자에게 균등한 성격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배 방식은 농민들의 생산 및 경영능력 또는 설비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토지를 분배하므로 효율성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

19) 반환방식은 몰수투지에 대한 소유권관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장기화되어 북한주민의 법적 안전성과 개발과 투자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전 권리를 부여하여 개별 농민들의 경영능력에 따라 토지가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농업 상황을 고려할 때 분배 방식은 다수의 소농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 경영구조의 규모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분배를 통한 대중적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영농의 규모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헝가리에서 실시하였던 Voucher 교부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체제전환의 과정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개혁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화 지수(LI)는 농업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유화 지수가 높을수록 농업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화 지수를 토대로 체제전환국을 선도개혁그룹[20], 중도개혁그룹[21], 지체개혁그룹[22]으로 나누어 농업 생산성 값을 비교한 결과, 선도개혁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농업 생산 기술효율성이 0.7520로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선행연구는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정책적 요인)과 거시경제 실적(경제성장률, 물가안정)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시장경제요소 도입의 성과지표(자유화지수, 체제전환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과 물가안정화 정도가 높음을 보이고 있다[2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이 빠른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화, 사유화 및 시장인프라 구축과 같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의 추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야기하며, 그 중 일부는 농업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져 체제전환국의 농업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체제전환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미래예측을 가능케 하여 체제전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체제전환기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안정기의 경제상태보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상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는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적 거래비용을 더욱 상승시키고, 국민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De Melo et al.(1997)는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경제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경제체제 경험 여부가 경제체제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0년대 영리활동의 자유화, 자율적 기업경영과 같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체제전환정책에 따른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장제도의 경험은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성장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개혁·개방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CIS를 비롯한 동구권의 국가들은 시장경제 개혁을 실시한 이후 경기가 후퇴하고 실업이

---

20) 자유화 지수의 평균값이 3.5이상인 국가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해당된다.

21) 자유화 지수의 평균값이 3.0～3.5사이인 국가로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가 해당된다.

22) 자유화 지수의 평균값이 3.0미만인 국가로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 해당된다.

23) De Melo, Denizer, Gelb(1996), Sachs(1996), Fisher, Sahay, Vagh(1996), Aslund, Boone, Johnson(1996)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급증하는 전환불황(transformation recession)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경제체제로의 전환에서 피해를 입고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는 체제전환기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끝으로 체제전환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체제전환 이전의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초기여건과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혁이전 1인당 소득, CMEA 무역의존도,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CMEA 무역의존도, 외환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의 왜곡정도가 클수록 농업 생산이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반면 개혁이전의 1인당 소득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농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의 경제체제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자유화, 안정화, 사유화 및 시장인프라 구축과 같은 체제전환 정책들 간에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체제전환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특정 국가가 지닌 초기조건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제전환 정책은 경제자유화, 안정화, 사유화 및 시장인프라 구축과 같은 체제전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정책수단, 범위 및 강도를 결정하는데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조건이 고려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체제전환 정책을 고려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제약조건은 체제전환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왜곡의 정도이다. 동유럽(CEE) 체제전환국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 왜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중공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한 과공업화(over-industrialization)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역특화와 특혜무역에서 비롯된 무역구조의 왜곡이 체제전환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들이다. 이러한 산업왜곡은 산업간 가격구조의 왜곡을 야기하며, 가격구조의 왜곡이 심할수록 가격자유화, 금융긴축 및 사유화 같은 체제전환 정책들은 경제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화와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왜곡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적절한 환율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은 공정환율과 대내외 가격을 반영하는 시장환율이라는 이원적인 환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는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환율 시스템 개혁을 통해 공정환율과 시장환율간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을 단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이 공존하는 가운데 수출부문이 직면하게 되는 환율이 시장환율에 유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개방 초기에 실시하였던 '내부결제환율(internal settlement rate)'[24]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공정환율은 비무역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시장환율에 근접하는 별도의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이석기 외, 2009).

24)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인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공식환율과 '내부결제환율'의 이중환율제를 유지하였다. 공식환율은 비무역거래(관광, 송금, 직접투자) 등에 적용하고, 내부결제환율은 무역회사와 상품공급 기업들 간의 결제에 사용하였다. 내부결제환율은 초기에는 자국통화를 대폭 평가절하한 채 고정환율제도가 유지되었으나, 1985년 이후 외환거래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내부결제환율은 사실상 시장환율과 같아졌다(이석기 외, 2009).

둘째,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북한은 동구권 체제전환국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경제자유화의 진행으로 시장수요가 계획과 배급체제를 벗어나 활성화되는 경우 경공업제품 및 소비재 부문에서 공급부족현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공업 병목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공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경공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은 중공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방출된 유휴인력을 활용하며, 국민들의 소비를 충족시킬 소비재 분야 및 에너지자원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갑열 (1997), “통일후 북한토지개혁방안에 관한 논의”, 지역개발연구,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두원 (2000), “이행경제개혁유형의 결정요인과 개혁의 성과”, 경제발전연구, 제5권 제 2호, 한국경제발전학회.

이석기 외. (2009),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이양호 (2003),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농촌경제, 제25권 제 1호.

박준기 외. (2003),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여천(2000),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2003),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과 초기조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비교경제학회.

조양현(2007), “EBRD의 동유럽 체제전환국 평가와 활용사례,”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최준욱 외. (2001),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Aigner, D., C. A. K. Lovell and P. Schmidt (1977), "Formulation and Estimation of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6: 21-37.

Battese, G. E. and T. J. Coelli(1995), "A Model for Technical Inefficiency Effects in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or Panel Data," Empirical Economics 20, 325-332.

Cerovic B. and A. Nojkovic(2009), "Transition and Growth: What was tought and what happened," Economic Annals

Csaki, C. and Lerman, Z. (1996), Agricultural transition revisited: issue of land reform and farm structuring in East Central Europe and the former USSR, Quarterly Journal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35(3): 211-240.

Csaki, C., H. Kray, and S. Zorya (2006), "The Agrarian Economies of Central-Eastern Europ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World Bank Working Paper No. 46, The World Bank.

Chambers R.G., Chung Y., and Färe R. (1996), "Benefit and Distance Functions",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70, pp. 407-419.

Chambers R.G., Chung Y., and Färe R. (1998), "Profit,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s, and Nerlovian Efficiency", *Journal of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Vol. 98, pp. 351-364.

Coelli, T. J. (1996), A Guide to FRONTIER Version 4.1: A Computer Program for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and Cost Function Estimation, Center for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University of New England.

Coelli, T.J., D.S. Rao and G.E. Bettese(1999), *An introduction to Efficienct and Productivity Analysi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e Melo, M. and A. Gelb (1996), "Circumstance and Choice −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The World Bank.

De Melo, M., C. Denizer and A. Gelb (1996), "From Plan to Market:Patterns of Transi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564,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Transition Economic Division.

EBRD, Transition Report(variours year).

European Commission (1998), Agricultural Situation and Prospects in the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 Poland, 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 Brussels.

FAO (2009), FAO STAT

Fischer, S. and Sahay, R. (2000), "The Transition Economies After Ten Years", IMF Working Paper 00/30/2000.

Fischer, S. and Sahay, R. (2004), "Transition Economic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 April 14, 2004.

Heath, J. R.(2003), "Agricultural Policy Reform in the ECA Transition Economies, 1991-2002",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Johnson, D. G. and K. McConnell Brooks(1983), 'Prospects for Soviet Agriculture in the 1980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Kim, Hanho and Donghwan An(2008),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Changes of Agricultural Sector in Transition Countrie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Policy Reform and Initial Condition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2. No. 3: 3-23

Kim, Hanho, Sangjun Lee, Donghwan An (2006), “The Effects of Agricultural Reform on the Productivity Changes in Agricultural Sector of Transition Countrie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국제지역연구)』, Vol. 10. No. 3: 11-33

Kumbhakar, S. C. and C. A. K. Lovell (2000),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Cambridge, UK

Lee, T., Choi, K. Boo, S. Kim, O. Kwon, K. Kim and H. Kim (2004), "Agricultural Reform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Unification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 1,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Lerman, Zvi (1999). Agriculture in ECE and CIS: from Common Heritage to Divergence. World Bank.

Lerman, Zvi (2000). “Status of Land Reform and farm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 Regional Overview.” in Csaba Csaki and Zvi Lerman (eds.), Structural Change in the Farming Sector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465, pp.3～20.

Lerman, Z., C. Csaki and G. Feder (2002), "Land Policies and Evolving Farm Structures in Transition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Lerman, Z., Y. Kislev, D. Biton and A. Kriss (2003), "Agricultural Out and Productivity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51, pp. 999-1018.

Lerman, Z., C. Csaki and G. Feder (2004), "Agriculture in Transition: Land Policies and Evolving Farm Structrues in Post-Soviet Countries", Lanham, MD: Lexington Books

Latruffe L., K. Balcombe, S. Davidova and K. Zawalinska (2004), "Determinats of technical efficiency of crop and livestock farms in Poland," Applied Economics, 29:51-65

Luenberger D. G. (1995), *Microeconomic Theory*, Boston, McGraw-Hill.

Mathijs, E. and J.F.M. Swinnen (1997), "The Economics of Agricultural Decollectivization in East Central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Policy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 9,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Macours, K. and J.F.M. Swinnen (1999), "Patterns of Agrarian Transition", Policy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 19,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Macours, K. and J.F.M. Swinnen (2000), "Impact of Reforms and Initial Conditions on Agricultural Output and Productivity Chang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2:5, pp. 1149-55.

Meeusen, W., and van den Broeck, J. (1977) Efficiency estimation from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s with composed error,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 435-444

Sachs, Jeffrey D., "The Transition at Mid Decad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Proc. 86, 2:128-133

Stiglitz, J. E. and Hoff, K. (2003), " A Dynamic Model of the Demand for the Rule of Law, with Applications to Post-Communist Transition," World Bank, Washington, D. C., Processed.

Swinnen, Johan F.M. (1997). An Explanation of Land Reform Choic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olicy Research Group Working Paper no.5.

Swinnen, J.F.M. (1999), "The Political Economy of Land Reform Choic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conomics of Transition*, Vol. 7, pp. 637-664.

Swinnen, J.F.M. (2006), "Policy Reform and Agricultural Adjustment in Transition Countries", in: Blandford, D. (eds.): *Policy Reform and Adjust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s of Developed Countries*

Swinnen, J. and L. Vranken (2006), "Causes of Efficiency Change in Transition: Theory and Cross-Country Survey Evidence from Agriculture", LICOS Discussion Paper 172/2006, LICOS Centre for Transition Economics,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Swinnen, J. and L. Vranken (2010), "Reforms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Republics: 1989-2005",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33: 241-258.

World Bank (200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제2회의 (15:50~17:30)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지원

• 사회 : **황상익**(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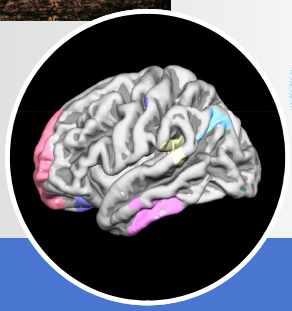
주제 4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심리, 신체적 외상 사건 경험과 정신건강상태 평가

• 발표 : **류인균**(의학)
• 토론 : **조영아**(상지대)

주제 5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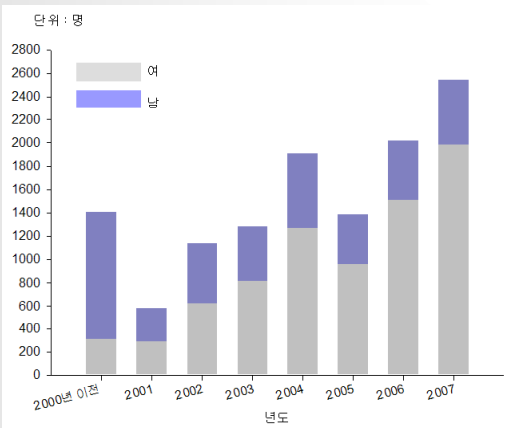
• 발표 : **최명애**(간호학)
• 토론 : **김정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심리, 신체적 외상사건 경험과 정신건강상태



류인균

왜 북한 이탈 주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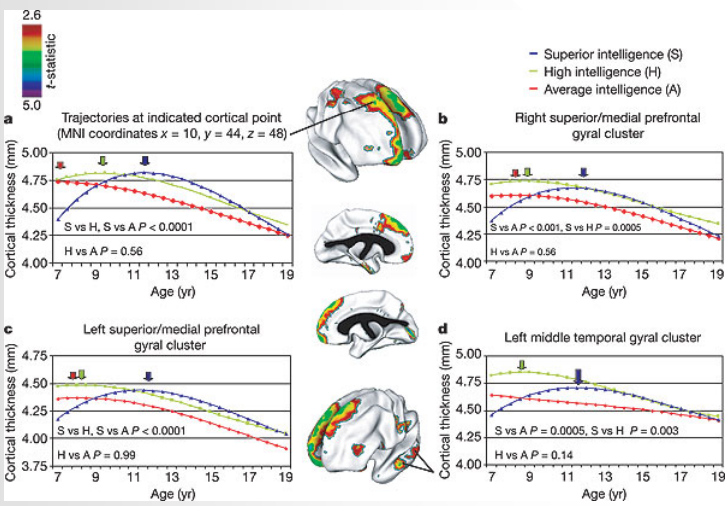


- 2008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Ministry of Unification, 2008),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2,254명으로 집계됨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왜 북한 이탈 주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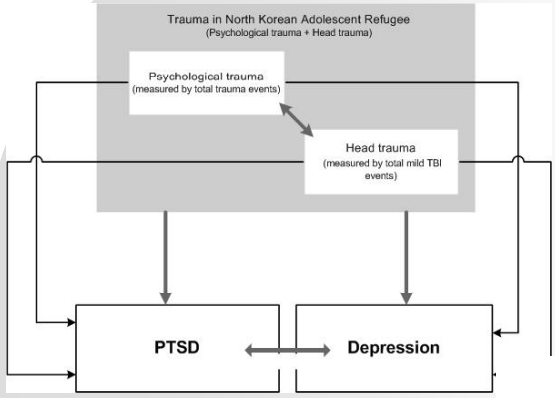
-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전 북한 내 체류 시기, 탈북 과정 및 이후 중국, 베트남 등 체류 과정에서 많은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옴 (Han et al, 2002; Hong et al, 2005; Jeon et al, 2005; Lee et al, 2001).
- 이러한 외상사건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건강상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타 난민 연구에서 제안되어 왔음. 이러한 정신건강상태는 난민의 이후 사회 적응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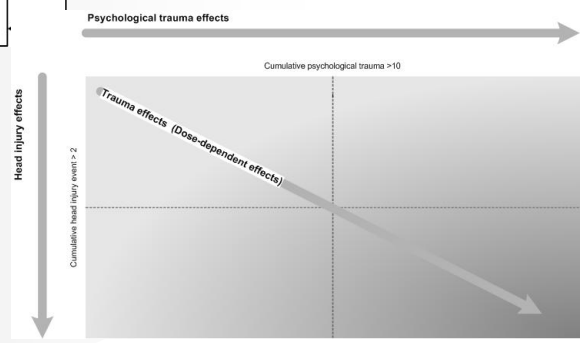
왜 청소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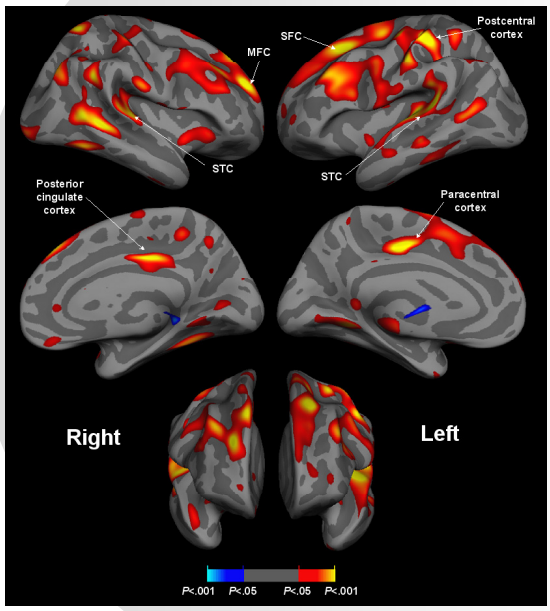
- 청소년기는 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기.
- 이 때 받은 심리적 신체적 외상은 뇌발달과 향후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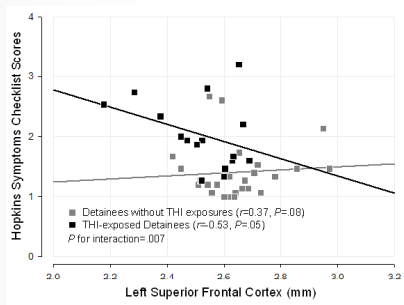
왜 심리적, 신체적 외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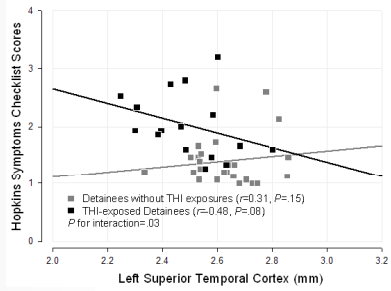




왜 두부 외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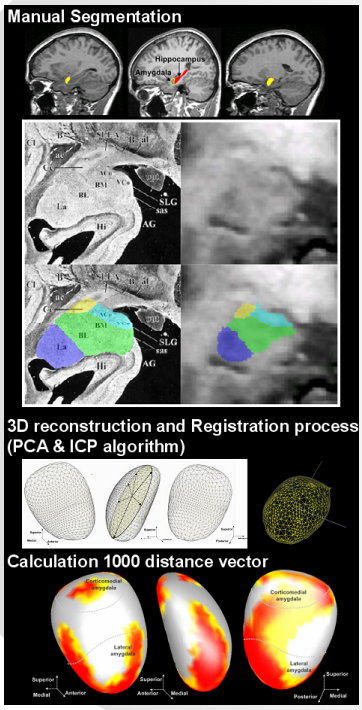
어떤 외상을 받았나?

Traumatic Event*
Lack of food or water‡
Severe
Moderate
Mild
Ill health without access to medical care
Lack of refuge or housing
Beating to the body
Separation from family
Hiding for fear of spotted by Public Security Officers of China and North Korea
Rape and sexual abuse
Family or friends repatriated to North Korea
Repatriated to North Korea
Imprisonment
Brainwashing
Torture
Severe beating by political force
Family or friends executed
Mutilated
Human trafficking
Under ideological suspicion for political reasons
Confiscation or destruction of personal property
Natural disasters including floods
Forced public confession
Forced betrayal of family or friends
Impartial treatment due to political background

어떤 외상을 받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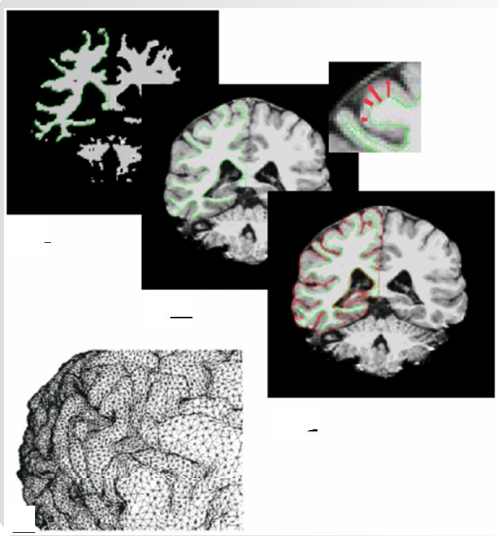
Torture Event
Severe food restriction
Severe beating
Forced labor like animal or slave, overexertion
Submersion
Strangulation
Forced confession of colleagues' wrongdoings
Forced witnessing of public execution
Forced beating of colleagues to death or to causing disability
Forced carrying bodies of colleagues and burying them
Solitary confinement
Brainwashing
Threats, humiliations
Sleep deprivation
Writing confessions numerous times
Suspension from a rod by hands and feet
Exposed to unhygienic conditions conducive to infections or other diseases

심리적 외상이 영향을 미친 뇌의 부위는?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연관.

두부 외상(신체적외상)이 영향을 미친 뇌의 부위는?



- 우울증과 연관.

제안점

-향후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이해, 이의 뇌생물학적 기반 증거 수집 및 뇌기반 치료법 발견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통일한국이 도래했을 때, 그간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의 도구로도 사용.

- 각종 유해 환경, 폭력 등에 노출된 한국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 조사

A study on Health Knowled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Services Need of North Korean Defectors

연구책임자 : **최 명 애**(서울대 간호대학 간호학과)
공동연구원 : **이 명 선**(서울대 간호대학 간호학과)
최 정 안(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신 기 수(적십자대학 간호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2002년 1134명, 2004년 1894명, 2006년 2018명, 2008년 2809명으로 계속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초기입국단계, 시설보호 단계,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단계를 거쳐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받은 후 국내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통일부, 2000; 통계청, 2009).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당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잠재되어 있던 질병들이 남한 입국 후 발병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열악한 생활환경 뿐 아니라 탈출 후 입국 전까지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존에 위협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이다(윤인진과 김숙희, 2005; 최명애와 최정안, 2009).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였으며(김경철 등, 2006; 최명애 등, 2007), 심리사회적 건강상태도 불량하였고(김미령, 2005; 최명애 등, 2007; 한인영, 2001; 한인영과 이소래, 2002) 만성질환 이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철 등, 2006; 최명애 등, 2007). 최명애 등(2007)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의 83.1%는 남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질환을 앓았으며 평균 질병이환 횟수가 2.3개로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가 시급함을 제시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로 소화기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많이 호소하였다. 계통별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질환은 소화기계 질환의 위염, 근골격계 질환의 관절염, 정신과 문제의 우울증이었다(김경철 등, 2006; 최명애 등, 2007).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과 제3국에서 잘못된 건강지식을 습득하고, 부적절한 건강행위의 경험으로 남한에서의 건강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질병에 이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은 고열, 감염, 위급한 상황 등에서만 약물로 치료하며 증상이 나아

지면 당연히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최명애 등, 2007)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남한에 입국하여 생활하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자가 처방하여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례도 있었고, 보조식품 복용에 치우치는 사례도 있었다(최명애와 최정안, 2009).

북한이탈주민의 치료추구 경험에 대한 연구(최명애와 최정안, 2009)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가간호 및 건강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지식, 건강행위 및 건강서비스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 지각된 장애성)도 동시에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1)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를 파악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를 파악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지각된 장애성)을 파악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그리고 지각된 장애성을 파악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행위와 제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한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설문지의 내용과 연구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41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자료수집 중 설문응답을 거절한 1인을 제외한 4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2008년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성비를 고려하여(통계청, 2009) 본 연구대상자의 성비를 여성 7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2. 연구도구

① 건강지식

이동숙(2003)이 개발한 건강지식 도구와 하귀염(2005)이 개발한 건강지식 도구를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주요한 성인병 8문항, 암 11문항, 성병 4문항과 건강증진 4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답하도록 하였으며, 틀린 답이나 모른다고 답할 경우 0점을 부여하고, 정답을 기술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0이었다.

② 건강행위

Walker(1995)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Ⅱ(HPLP-Ⅱ)를 서현미(2001)가 번역한 도구를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인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동 및 운동 8문항, 영양 및 식이 9문항, 영적 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50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안한다(1점)'에서부터 '항상 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의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64이었다.

③ 건강서비스 요구

건강서비스 요구는 건강서비스의 영역과 건강서비스 운영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건강서비스 영역에 대한 질문은 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 건강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건강교육에 대한 기타 의견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건강상태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질병 개수, 질병단계, 복용중인 약물, 그리고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와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질병의 단계,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와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Yi M. et al.,(2009)가 Lancaster university에서 2001년에 실시한 '암 환자의 심리사회적 요구조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 2인이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 건강상태 측정을 위한 최종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사회적 지지

Gimet, Nancy,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질문지를 최인실(200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문가 지지, 친구 지지, 가족 지지의 3개 영역 12개 항목에 대해서 5점 평점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9이었다.

⑥ 자기효능

박재순(1995)이 선행도구(Bandura & Adams, 1977; 구미옥, 1992)와 중년 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헌을 근거로 수정한 도구로 1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0-100점 범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7이었다.

⑦ 지각된 장애성

서현미(2000)가 문정순(1990)의 건강신념 측정도구에서 장애성에 관한 문항들과 건강증진행위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7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북한이탈 주민들이 설문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 2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검증한 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 또는 보충설명을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미있는 문항을 첨가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해 훈련을 받은 대학원생과 학부과정생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4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자 모집 방법은 연구자의 인적 연계망을 이용하여 선정 기준에 맞는 연구 대상자를 수 명씩 선정한 후 눈덩이 표출법으로 모집하였다. 눈덩이 표출법으로 모집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통하여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장소는 연구대상자의 집이나 소개시켜준 다른 대상자의 집이며,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였다.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 주어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만을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중단 할 수 있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를 위하여만 쓰여질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해주었고, 필요시 일대일 설명을 통해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설문지 완성 시간은 30～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수고에 대한 답례로 사례비나 사례품을 지급받았다.

4.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건강행위, 건강지식, 건강서비스 요구에 관련된 것으로 위험성은 전혀 없지만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에게 접근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추천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설문 조사 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며 설문 조사로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설문 조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원할 경우 동의서와 설문지에 서명이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IRB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구의 내적일관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구하였다.

②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지식, 건강행위, 건강서비스 요구,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지각된 장애성을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③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식, 건강행위,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그리고 지각된 장애성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④ 건강행위와 제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410

특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	104 (25.4)		
	여	306 (74.6)		
연령	20～39세(청년층)	109 (26.6)	50.08(.79)세	20～90세
	40～59세(중년층)	145 (35.4)		
	60세 이상(노년층)	156 (38.0)		
학력	중·고등학교 졸업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	267 (65.1)		
	대학교 졸업 이상	134 (32.7)		
	기타	9 (2.2)		
종교	유	328 (80.0)		
	무	82 (19.8)		
	무응답	1 (0.2)		
주택형태	임대아파트	372 (90.7)		
	전세, 월세	36 (8.8)		
	개인 소유	1 (0.2)		
	기타	1 (0.2)		
직업	무	355 (86.6)		
	유	55 (13.4)		
가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131 (32.0)	686,969원 (408,004원)	70,000～400,000원
	50～100만원 미만	180 (43.9)		
	100～150만원 미만	59 (14.4)		
	150만원 이상	21 (5.1)		
	무응답	19 (4.6)		
지각된 사회경제적 수준	상	8 (2.0)		
	중	42 (10.2)		
	하	360 (87.8)		
의료보장형태	국민건강보험(직장)	29 (7.1)		
	국민건강보험(지역)	16 (3.9)		
	의료보호	358 (87.3)		
	기타	7 (1.7)		

특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범위
가족수	혼자 사는 사람	173 (42.2)	2.2(.06)명	1～7명
	함께 사는 가족 있음	237 (57.8)		
남한거주기간	3년 미만	59 (14.4)	64.05개월 (31.63개월)	4개월～14년
	3～5년 미만	119 (29.0)		
	5년 이상	231 (56.3)		
	무응답	1 (.2)		
입국전 외국생활 기간	1년 미만	129 (31.5)	32.97개월 (32.95개월)	2일～26년
	1～5년 미만	158 (38.5)		
	5년 이상	87 (21.2)		
	무응답	36 (8.8)		

2. 건강지식

<표 2> 건강지식 N=410

	평균(표준편차)	범위
건강지식 총점	.56 (.19)	0～.926
성병 관련 지식	.34 (.30)	0～1
암 관련 지식	.54 (.19)	0～.909
성인병 관련 지식	.63 (.24)	0～1
건강증진 관련 지식	.71 (.27)	0～1

<표 3> 건강지식 세부항목 N=410

문항	평균(표준편차)	범위
23.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남성보다 폐암에 더 잘 걸린다.	.14 (.35)	0-1
14.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이다.	.18 (.38)	0-1
2. 간암은 민간요법으로 막을 수 없다	.26 (.44)	0-1
21. 에이즈는 키스나 포옹과 같은 신체접촉으로 옮지는 않는다.	.26 (.44)	0-1
16.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된 사람과 성행위를 해도 성병에 걸리지 않는다.	.27 (.44)	0-1
11. 위암은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34 (.48)	0-1
6. 내가 건강하더라도 감염된 사람과 성행위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40 (.49)	0-1
24. 내가 건강하더라도 감염된 사람과 성행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	.42 (.50)	0-1
8. 음식을 짜게 먹는 것과 고혈압은 관계가 있다.	.46 (.50)	0-1
20. 암은 전염될 수 없다.	.47 (.50)	0-1
26. 나이가 들수록 암에 더 잘 걸릴 수 있다.	.51 (.50)	0-1
19.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해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	.52 (.50)	0-1
7. 위암환자의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위암에 더 잘 걸릴 수 있다.	.60 (.49)	0-1
13. 폐암환자의 친척은 다른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62 (.49)	0-1
25. 칼슘은 우유 및 유제품에 들어있다.	.66 (.47)	0-1
1. 흡연하면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	.67 (.47)	0-1
15. 간염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67 (.47)	0-1
5.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대부분 암을 예방할 수 있다.	.68 (.47)	0-1
17. 식사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짠 음식을 즐겨 먹으면 위암에 더 잘 걸릴 수 있다.	.69 (.46)	0-1
22.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으면 심혈관 질환에 더 잘 걸린다.	.71 (.45)	0-1
4. 간염보균자(B형 간염)는 의료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4 (.44)	0-1
12.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장병, 당뇨,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	.79 (.41)	0-1
18. 뚱뚱하면 당뇨,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80 (.40)	0-1
9. 음주는 간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82 (.38)	0-1
27. 운동은 한번 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해야 효과가 있다.	.82 (.39)	0-1
3.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	.85 (.36)	0-1
10.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약해져 질병에 쉽게 걸린다.	.85 (.35)	0-1

성인병 관련 지식 : 1, 4, 8, 12, 14, 15, 18, 22

암 관련 지식 : 2, 3, 5, 7, 9, 11, 13, 17, 20, 23, 26

성병 관련 지식 : 6, 16, 21, 24

건강증진 관련 지식 : 10, 19, 25, 27

<표 4> 연령층에 따른 건강지식

	청년층 (n=109)	중년층 (n=145)	노년층 (n=156)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건강지식 총점	.56(.19)	.55(.20)	.58(.19)	.826	.439	
성인병 관련 지식	.60(.24)	.62(.25)	.66(.24)	1.934	.146	
암 관련 지식	.54(.19)	.53(.20)	.56(.20)	1.415	.244	
성병 관련 지식	.41(.32)	.32(.02)	.30(.28)	4.092	.017*	청년층>노년층
건강증진 관련 지식	.73(.29)	.69(.29)	.73(.24)	.971	.379	

*p<.05

<표 5> 학력에 따른 건강지식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n=267)	전문대졸 이상(n=134)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지식 총점	.54(.20)	.61(.16)	-3.872	.000*
성인병 관련 지식	.60(.26)	.68(.21)	-3.358	.001*
암 관련 지식	.52(.21)	.59(.16)	-3.614	.000*
성병 관련 지식	.31(.30)	.37(.29)	-1.970	.049*
건강증진 관련 지식	.69(.29)	.77(.24)	-2.929	.004*

*p<.05

<표 6> 직업유무에 따른 건강지식

	직업무(n=355)	직업유(n=55)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지식 총점	.56(.20)	.60(.16)	-1.551	.122
성인병 관련 지식	.62(.25)	.67(.20)	-1.465	.144
암 관련 지식	.54(.20)	.56(.17)	-.744	.457
성병 관련 지식	.32(.29)	.43(.35)	-2.106	.039*
건강증진 관련 지식	.71(.28)	.74(.26)	-.666	.506

*p<.05

<표 7> 함께 사는 가족 유무에 따른 건강지식

	혼자 사는 사람(n=173)	함께 사는 가족 있음(n=237)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지식 총점	.55(.21)	.57(.18)	-1.026	.305
성인병 관련 지식	.63(.27)	.63(.23)	.091	.927
암 관련 지식	.54(.21)	.55(.19)	-.446	.656
성병 관련 지식	.31(.28)	.36(.31)	-1.429	.154
건강증진 관련 지식	.67(.29)	.74(.26)	-2.586	.010*

*p<.05

<표 8>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건강지식

	3년 미만[a] (n=59)	3-5년 미만[b] (n=119)	5년 이상[c] (n=231)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건강지식 총점	.50(.20)	.59(.19)	.57(.19)	4.628	.010 *	a < b, c
성인병 관련 지식	.55(.28)	.66(.24)	.63(.24)	4.169	.016 *	a < b
암 관련 지식	.47(.21)	.56(.19)	.55(.19)	4.342	.014 *	a < b, c
성병 관련 지식	.31(.30)	.36(.31)	.33(.29)	.542	.582	
건강증진 관련 지식	.62(.32)	.73(.27)	.73(.26)	3.784	.024 *	a < c

*p<.05

3. 건강행위

<표 9> 건강행위 N=410

	평균(표준편차)	범위
건강행위 총점	2.37 (.57)	1-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2.17 (.65)	1-4
신체활동/운동	2.23 (.70)	1-4
스트레스 관리	2.33 (.63)	1-4
영양/식이	2.43 (.61)	1-4
대인관계	2.50 (.63)	1-4
영적성장	2.53 (.68)	1-4

<표 10> 건강행위 세부항목 N=410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범위
28.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1.96 (.92)	1-4
43.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1.96 (.97)	1-4
32.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신호를 알기 위해 나의 몸을 관찰한다.	2.01 (.91)	1-4
31. 매일 우유, 요구르트, 두유를 2-3회 먹는다.	2.03 (.94)	1-4
38. 나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에게 정보를 구한다.	2.03 (.92)	1-4
10.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20분 이상 땀이 많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한다.	2.05 (.96)	1-4
27.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2.06 (.93)	1-4
4. 계획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2.11 (.96)	1-4
21. 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충고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사, 약사, 간호사의 의견을 물어본다.	2.11 (.94)	1-4
22. 취미, 오락을 위해 신체적인 활동(예: 수영, 춤, 자전거 등)을 한다.	2.11 (.96)	1-4
49. 필요하면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다.	2.13 (.97)	1-4
34.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2.14 (.94)	1-4
23.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2.20 (.88)	1-4
1.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2.21 (.80)	1-4
33.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2.21 (.94)	1-4
46. 나보다 더 큰 어떤 힘(예: 신, 하느님, 부처님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2.22 (1.07)	1-4
3.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사, 약사, 간호사와 의논한다.	2.26 (.91)	1-4
35. 매일 흥미와 즐거움을 찾는다.	2.29 (.91)	1-4
42. 식품을 살 때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표시를 읽고 산다.	2.29 (1.06)	1-4
15. 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내용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한다.	2.31 (1.01)	1-4
47.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2.31 (.93)	1-4
20.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는다.	2.32 (.93)	1-4
24.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2.33 (.89)	1-4
37.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2.33 (.84)	1-4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2.34 (1.02)	1-4
39.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한다.	2.34 (.94)	1-4
36. 교제(또는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2.35 (.93)	1-4
2.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2.37 (.88)	1-4
44.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한다.	2.38 (.97)	1-4
11. 매일 일정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2.40 (.95)	1-4
50.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한다.	2.42 (.99)	1-4
29.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	2.44 (1.00)	1-4
17. 나의 삶에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2.46 (.95)	1-4
19. 가까운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2.48 (.93)	1-4
25.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한다.	2.51 (.88)	1-4
16. 매일 일정량의 신체활동(예: 장보기, 집안일 하기, 외출하기 등)을 한다.	2.52 (.97)	1-4

문 항	평균 (표준편차)	범위
9. 건강증진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는다.	2.54 (.94)	1-4
26. 매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다.	2.56 (.88)	1-4
45.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2.57 (.94)	1-4
40. 매일 일정 시간동안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2.58 (.89)	1-4
8. 설탕과 당분함유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2.62 (1.00)	1-4
48. 아침을 먹는다.	2.62 (1.09)	1-4
13. 의미있고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2.65 (.95)	1-4
12. 나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2.67 (1.03)	1-4
14. 나는 하루에 밥을 세끼는 먹는다.	2.69 (1.10)	1-4
30.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2.72 (.91)	1-4
7.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 한다.	2.76 (.89)	1-4
6.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2.77 (.94)	1-4
1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2.77 (1.00)	1-4
41.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2.77 (.99)	1-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 3, 9, 15, 21, 32, 38, 43, 49
신체활동/운동 : 4, 10, 16, 22, 27, 33, 39, 44
스트레스 관리 : 5, 11, 17, 23, 28, 34, 40, 45
영양/식이 : 2, 8, 14, 20, 26, 31, 37, 42, 48
대인관계 : 1, 7, 13, 19, 25, 30, 36, 47
영적성장 : 6, 12, 18, 24, 29, 35, 41, 46, 50

<표 11> 연령층에 따른 건강행위

	청년층 (n=109) 평균 (표준편차)	중년층 (n=145) 평균 (표준편차)	노년층 (n=156)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건강행위 총점	2.23(.46)	2.27(.61)	2.57(.56)	14.533	.000*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2.02(.56)	2.10(.66)	2.35(.67)	10.302	.000*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신체활동/운동	2.01(.61)	2.15(.73)	2.45(.68)	14.398	.000*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영양/식이	2.23(.59)	2.32(.60)	2.68(.55)	23.149	.000*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영적성장	2.47(.57)	2.45(.72)	2.64(.71)	3.503	.031*	
대인관계	2.44(.47)	2.41(.65)	2.63(.68)	5.033	.007*	중년층<노년층
스트레스 관리	2.18(.51)	2.24(.67)	2.52(.64)	12.089	.000*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p<.05

<표 12> 성별에 따른 건강행위

	남(n=104)	여(n=306)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행위 총점	2.40(.52)	2.37(.59)	.330	.742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2.11(.56)	2.19(.68)	-1.209	.228
신체활동/운동	2.40(.64)	2.17(.72)	2.849	.005*
영양/식이	2.42(.55)	2.43(.63)	-.148	.882
영적성장	2.46(.65)	2.56(.69)	-1.257	.210
대인관계	2.43(.58)	2.52(.64)	-1.308	.192
스트레스 관리	2.35(.59)	2.32(.65)	.410	.682

*p<.05

<표 13> 종교유무에 따른 건강행위

	종교유(n=328)	종교무(n=81)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행위 총점	2.42(.57)	2.20(.56)	2.913	.004*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2.20(.66)	2.05(.61)	1.815	.070
신체활동/운동	2.28(.69)	2.02(.71)	2.964	.003*
영양/식이	2.47(.59)	2.26(.67)	2.826	.005*
영적성장	2.59(.69)	2.30(.60)	3.486	.001*
대인관계	2.54(.64)	2.34(.54)	2.627	.009*
스트레스 관리	2.37(.64)	2.18(.61)	2.406	.017*

*p<.05

<표 14> 학력에 따른 건강행위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n=267)	전문대졸 이상(n=134)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행위 총점	2.34(.59)	2.44(.55)	-1.560	.12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2.16(.65)	2.20(.66)	-.513	.608
신체활동/운동	2.19(.71)	2.29(.69)	-1.387	.166
영양/식이	2.38(.62)	2.51(.58)	-1.961	.051
영적성장	2.48(.70)	2.63(.67)	-2.159	.031*
대인관계	2.45(.63)	2.59(.62)	-2.109	.036*
스트레스 관리	2.29(.64)	2.40(.63)	-1.635	.103

*p<.05

<표 15> 직업유무에 따른 건강행위

	직업무(n=355)	직업유(n=55)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행위 총점	2.37(.59)	2.43(.46)	-.847	.40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2.17(.66)	2.20(.58)	-.330	.742
신체활동/운동	2.24(.72)	2.17(.64)	.643	.521
영양/식이	2.43(.61)	2.41(.57)	.232	.817
영적성장	2.49(.69)	2.81(.57)	-3.247	.001*
대인관계	2.49(.65)	2.57(.46)	-1.110	.270
스트레스 관리	2.33(.65)	2.33(.54)	.000	1.000

*p<.05

<표 16> 함께 사는 가족 유무에 따른 건강행위

	혼자 사는 사람(n=173)	함께 사는 가족 있음(n=237)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행위 총점	2.46(.63)	2.31(.52)	2.439	.019*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2.21(.70)	2.14(.61)	1.082	.280
신체활동/운동	2.36(.74)	2.13(.66)	.087	.001*
영양/식이	2.52(.62)	2.36(.59)	2.619	.009*
영적성장	2.58(.74)	2.50(.64)	1.123	.262
대인관계	2.54(.71)	2.47(.56)	.965	.336
스트레스 관리	2.43(.71)	2.26(.57)	2.470	.014*

*p<.05

4. 건강서비스

<표 17> 건강서비스 방법 N=410

	빈도(%)
전화상담	113(27.6)
온라인상담	20(4.9)
건강교육, 강의	154(37.6)
건강수첩, 책자, 팜플렛 등 배부	73(17.8)
기타	35(8.5)
무응답	15(3.7)

<표 18> 성별에 따른 건강서비스 방법

	남(n=104)	여(n=306)
	빈도(%)	빈도(%)
전화상담	27(26.0)	86(28.1)
온라인상담	10(9.6)	10(3.3)
건강교육, 강의	38(36.5)	116(37.9)
건강수첩, 책자, 팜플렛 등 배부	18(17.3)	55(18.0)
기타	6(5.8)	29(9.5)
무응답	5(4.8)	10(3.3)

<표 19> 연령에 따른 건강서비스 방법

	청년층(20·30대) (n=109)	중년층(40·50대) (n=145)	노년층(60대 이상) (n=156)
	빈도(%)	빈도(%)	빈도(%)
전화상담	21(19.3)	40(27.6)	52(33.3)
온라인상담	13(11.9)	5(3.4)	2(1.3)
건강교육, 강의	34(31.2)	60(41.4)	60(38.5)
건강수첩, 책자, 팜플렛 등 배부	23(21.1)	28(19.3)	22(14.1)
기타	15(13.8)	8(5.5)	12(7.7)
무응답	3(2.8)	4(2.8)	8(5.1)

<표 20> 건강서비스 운영에 대한 의견 N=109

	빈도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 예) 요가, 노인운동	51
상담 및 교육 방법	
다양한 교육매체 활용 : 예) 팜플렛, TV	19
일대일 상담	13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	5
실질적 건강검진 및 치료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	5
정기적 건강검진	15
의료보험 개선	1

<표 21> 건강 상담 및 교육 내용 N=239

	빈도
구체적 질병에 대한 지식	
근골격계 질환	38
심혈관계 질환	23
소화기계 질환	16
신경계 질환	16
산부인과 관련 질환	5
비뇨기계 관련 질환	3
내분비계 관련 질환	8
정신과 질환	26
기타(구강, 피부, 암, 빈혈 등)	8
건강증진, 건강 상식 및 질병 예방	38
전반적 건강 문제	33
건강검진 방법	19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이용	5
의료 기구 사용법	1

5.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건강상태

<표 22> 건강상태 N=410

특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범위
현재 질병 개수	0개	115(28.0)	1.25(1.24)	0-9
	1개	169(41.2)		
	2개	68(16.6)		
	3개	40(9.8)		
	4개	10(2.4)		
	5개	3(.7)		
	6개	3(.7)		
	7개	1(.2)		
	9개	1(.2)		
복용중인 약물	없음	155(37.8)		
	있음	254(62.0)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4.03(1.67)	1-7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4.29(1.74)	1-7

<표 23> 연령층에 따른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및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청년층 (n=109)	중년층 (n=145)	노년층 (n=156)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4.51(1.56)	3.68(1.74)	4.01(1.60)	8.143	.000*	청년층>중년층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4.50(1.76)	4.02(1.82)	4.38(1.63)	2.750	.065	

*p<.05

<표 24> 직업유무에 따른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및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직업무(n=355)	직업유(n=55)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3.89(1.64)	4.89(1.59)	-4.215	.000*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4.18(1.72)	4.95(1.73)	-3.055	.002*

*p<.05

<표 25> 가계 월평균 소득에 따른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및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50만원 미만[a](n=131)	50-100만원 미만[b](n=180)	100-150만원 미만[c](n=59)	150만원 이상[d](n=21)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4.12(1.69)	3.79(1.58)	4.31(1.68)	4.86(1.42)	3.825	.010*	b<d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4.40(1.68)	4.00(1.69)	4.75(1.81)	5.00(1.58)	4.549	.004*	b<c

*p<.05

2) 사회적지지

<표 26> 사회적 지지 N=410

	평균 (표준편차)	범위
사회적 지지 총점	3.21 (.73)	1-5
전문가 지지	2.59 (.98)	1-5
친구 지지	3.43 (.84)	1-5
가족 지지	3.71 (.85)	1-5

<표 27> 사회적 지지 세부항목 N=410

문 항	평균(표준편차)	범위
전문가 지지		
1. 나는 행복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문가(의료인, 사회사업가 등)가 있다.	2.49(1.14)	1-5
5.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중요한 전문가(의료인, 사회사업가 등)가 있다.	2.61(1.16)	1-5
2.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문가(의료인, 사회사업가 등)가 있다.	2.63(1.14)	1-5
10. 내 인생에는 나의 기분과 느낌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전문가(의료인, 사회사업가 등)가 있다.	2.63(1.13)	1-5
친구 지지		
7.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을 때 친구(또는 친척, 동료, 이웃 등)에게 의지할 수 있다.	3.36(1.01)	1-5
12. 나는 나의 고민거리를 내 친구들(또는 친척, 동료, 이웃 등)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3.43(1.01)	1-5
6. 내 친구(또는 친척, 동료, 이웃 등)들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	3.45(.99)	1-5
9. 나의 행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또는 친척, 동료, 이웃 등)가 있다.	3.47(.99)	1-5
가족 지지		
8.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나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3.82(1.26)	1-5
11. 나의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우려 한다.	3.92(1.25)	1-5
4. 나는 가족에게 의지하고자 했을 때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4.01(1.21)	1-5
3. 나의 가족은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한다.	4.14(1.13)	1-5

전문가 지지 : 1, 2, 5, 10

친구 지지 : 6, 7, 9, 12

가족 지지 : 3, 4, 8, 11

<표 28> 함께 사는 가족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

	혼자 사는 사람(n=173)	함께 사는 가족 있음(n=237)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지지 총점	3.06(.84)	3.32(.63)	-3.386	.001*
전문가 지지	2.52(1.01)	2.64(.95)	-1.155	.249
친구 지지	3.38(.94)	3.47(.76)	-1.100	.272
가족 지지	3.45(1.02)	3.85(.71)	-3.768	.000*

*p<.05

3) 자기효능

<표 29> 자기효능 및 세부항목 N=410

	평균(표준편차)	범위
자기효능 총점	70.38(21.72)	8.3-100
세부항목 점수		
3. 새로운 운동을 계획한다면 중단 없이 계속할 자신이 있다.	63.73(29.01)	0-100
5.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자신이 있다.	66.16(27.75)	0-100
12. 매일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자신이 있다.	66.59(28.78)	0-100
4. 자주 몸을 펴주기 위한 맨손체조를 할 자신이 있다.	66.75(28.57)	0-100
11.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자신이 있다.	67.90(26.47)	0-100
10. 다른 사람들과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	68.63(27.31)	0-100
6. 건강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기검진을 할 자신이 있다.	69.22(28.99)	0-100
8. 생활 안에서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찾을 자신이 있다.	70.83(26.73)	0-100
7.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	72.07(26.60)	0-100
2. 칼슘이 많은 음식을 고려하여 먹을 자신이 있다.	72.35(27.44)	0-100
9.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자신이 있다.	76.31(24.67)	0-100
1. 나는 건강을 위하여 술, 담배, 커피 등의 기호품을 삼갈 자신이 있다.	80.44(28.30)	0-100

<표 30> 연령층에 따른 자기효능

	청년층 (n=109) 평균 (표준편차)	중년층 (n=145) 평균 (표준편차)	노년층 (n=156)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자기효능	66.50(20.56)	68.42(24.45)	74.94(18.97)	5.847	.003*	청년층, 중년층<노년층

*p<.05

<표 31> 종교유무에 따른 자기효능

	종교유(n=328) 평균(표준편차)	종교무(n=81) 평균(표준편차)	t	p
자기효능	72.66(20.40)	61.08(24.43)	3.938	.000*

*p<.05

<표 32> 학력에 따른 자기효능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n=267)	전문대졸 이상(n=134)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기효능	69.04(22.92)	73.60(18.57)	-2.127	.034*

*p<.05

<표 33> 직업유무에 따른 자기효능

	직업무(n=355)	직업유(n=55)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기효능	69.58(22.34)	75.56(16.35)	-2.368	.020*

*p<.05

<표 34> 함께 사는 가족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

	혼자 사는 사람(n=173)	함께 사는 가족 있음(n=237)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기효능	73.85(23.62)	67.84(19.89)	2.776	.006*

*p<.05

4) 지각된 장애성

<표 35> 지각된 장애성 및 세부항목 N=410

	평균(표준편차)	범위
지각된 장애성 총점	1.99(.56)	1-3.4
세부항목 점수		1-4
5. 나는 건강행위를 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36(.93)	1-4
3. 나는 나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징후를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2.21(.89)	1-4
10. 나는 건강행위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2.01(.85)	1-4
4. 나는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2.01(.95)	1-4
2. 나는 건강행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1.97(.84)	1-4
7. 나는 의료기관 이용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1.97(.86)	1-4
8. 나는 건강행위가 나를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2(.88)	1-4
1. 나는 나태하고 게으른 성격 때문에 건강행위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1.90(.84)	1-4
6. 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여 건강행위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1.85(.82)	1-4
9. 나는 건강행위가 건강한 노후생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1.75(.85)	1-4

<표 36> 연령층에 따른 지각된 장애성

	청년층 (n=109)	중년층 (n=145)	노년층 (n=156)	F	p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각된 장애성	2.14(.48)	1.99(.55)	1.88(.59)	6.624	.001*	청년층>노년층

*p<.05

<표 37> 가계 월평균 소득에 따른 지각된 장애성

	50만원 미만[a](n=131)	50-100만원 미만[b](n=180)	100-150만원 미만[c](n=59)	150만원 이상[d](n=21)	F	p	Scheff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지각된 장애성	1.89(.51)	2.03(.58)	1.95(.51)	2.35(.48)	4.538	.004*	a<d

*p<.05

<표 38> 외국생활기간에 따른 지각된 장애성

	1년 미만[a] (n=129)	1-5년 미만[b] (n=158)	5년 이상[c] (n=87)	F	p	Scheff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지각된 장애성	1.90(.56)	2.03(.54)	2.10(.56)	3.598	.028*	a < c

*p<.05

6. 건강행위와 제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표 39> 건강행위와 제변수사이의 상관관계

	건강 지식 r(p)	지각된 신체적 건강상태 r(p)	지각된 정신적 건강상태 r(p)	사회적 지지 r(p)	자기 효능 r(p)	장애성 r(p)
건강행위 총점	.224* (.000)	.164* (.001)	.229* (.000)	.397* (.000)	.518* (.000)	-.280* (.00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	.121* (.016)	.015 (.762)	.050 (.321)	.399* (.000)	.373* (.000)	-.164* (.001)
신체활동/운동	.140* (.005)	.146* (.003)	.207* (.000)	.240* (.000)	.416* (.000)	-.297* (.000)
영양/식이	.214* (.000)	.149* (.003)	.215* (.000)	.324* (.000)	.470* (.000)	-.289* (.000)
영적성장	.261* (.000)	.187* (.000)	.251* (.000)	.378* (.000)	.519* (.000)	-.211* (.000)
대인관계	.219* (.000)	.136* (.006)	.202* (.000)	.426* (.000)	.498* (.000)	-.181* (.000)
스트레스 관리	.173* (.001)	.166* (.001)	.244* (.000)	.310* (.000)	.464* (.000)	-.220* (.000)

*p<.05

Ⅳ. 결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지식을 향상시키기위해 건강교육이 요구되며 건강행위이행을 증진시키도록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한다. 건강서비스 방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접적인 건강교육 및 강의를 선택하며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행위 이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족한 건강지식을 향상시키고, 전문가 지지를 포함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자기효능을 증진하고, 장애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